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朝鮮初期 戶長의 鄉村支配와 그 變化

2018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李 泰 京

朝鮮初期 戶長の 鄉村支配와 그 變化

指導教授 朴 平 植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李 泰 京

李泰京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年 1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말 호장층의 동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배경으로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가 그 기반을 달리해가는 과정을 밝힌 글이다. 고려초 이래 각 고을 民戶의 長이자 鄉吏의 首長으로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호장은 조선 건국 전후 향리를 지배층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적 흐름 속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유지·회복하려 하였다. 하나는 관직을 冒受한 후 그대로 향촌에 머물러 ‘留鄉品官’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단 호장으로 남되 外官이 주재하는 고을 官衙의 ‘衙前’이 되어 외관의 위세를 배경으로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邑司’에서 印信을 가지고 公務를 처리하는 등 방식 자체로만 보면 고려시기 호장의 향촌 지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鄉’이 향리인 호장의 독자적인 지배 영역으로 승인 내지 묵인되었던 고려초와 달리 외관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하는 ‘外方’으로 정착함에 따라,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수령의 통치 권력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기반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世宗 27년(1445) 실행된 田制 改編에서 人吏位田 및 任內 邑司의 公須位田이 혁파됨에 따라 호장은 ‘吏役’ 부담자로 규정되었고 읍사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 또한 박탈당했다.

읍사의 물적 자원인 公須田과 인적 자원인 正·史가 관아로 이속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으로 고을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호장층은, 아전이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초기 중앙 정부가 주력했던 지방통제 정책을 배경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土豪的 권력과 전통적 권위에 기초한 호장의 향촌 지배가, 제도화된 국가 권력에 기초한 수령의 통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中世國家 朝鮮의 集權化를 나타내는 表徵 중 하나였다.

주요어 : 戶長, 品官, 地方統制, 鄉村支配, 世宗朝 田制 改編, ‘衙前’

次 例

1. 序言	1
2. 高麗末 戶長層의 分化와 品官層의 擴大	5
3. 國初 地方統制의 強化와 戶長의 鄉村支配	18
4. 世宗朝의 田制 改編과 戶長의 ‘衙前’化	33
5. 結語	51
參考文獻	55
Abstract	61

1. 序言

우리나라 중세 지방통치는 집권적 지방제도인 郡縣制를 골격으로 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外官과 토착 지배층이 협력·견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新羅 智證王 6년(505), 전국의 州·郡·縣을 정하고 외관을 파견한 이래, 중세 국가는 가능한 한 모든 고을을 단일한 행정 구역인 郡縣으로 편성하고 외관을 파견하여 전국의 民을 국가가 직접 파악하고 통치하려 하면서도, 賦稅 徵收를 비롯한 군현 운영의 상당 부분을 토착 지배층에게 의지하였다. 이처럼 토착 지배층이 실제 군현 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이 막중했던 까닭에, 토착 지배층에 대한 회유와 통제는 지방통치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高麗初 이래 중세 국가가 가장 유의한 토착 지배층은 이른바 ‘鄉吏’였다. 향리는 新羅末 地方 豪族의 후손으로, 고려 成宗初 외관이 파견된 후에도 토착 지배층으로서 지배권을 인정받아 각자 본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¹⁾ 屬縣은 물론 외관이 파견된 主縣에서도 향리가 고을 지배를 주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조선 정부는 제도적으로 향리의 지배권을 통제·축소함으로써 전보다 집권적인 지방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의 향리는 이처럼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하던 시기 지방통치의 측면에서 나타난 諸 變動을 집약적으로 내포하는 존재였기에 일찍부터 先學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1) 고려시기 향리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有井智德, 「高麗の鄉吏について」 『東洋史學論集』 3, 1954.

金鍾國, 「高麗時代の鄉吏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962.

朴敬子, 「高麗 鄉吏制度의 成立」 『歷史學報』 63, 1974.

趙榮濟, 「高麗前期 鄉吏制度에 대한 一考察-制度上의 變化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6, 1982.

李純根, 「高麗初 鄉吏制의 成立과 實施」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李勛相, 「高麗中期 鄉吏制度의 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亞研究』 6, 1985.

朴敬子, 「高麗時代の 鄉吏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朴恩卿, 「고려 후기 향리층의 변동-世宗實錄地理志 續姓 분석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64, 1987.

金光哲, 「麗蒙戰爭과 在地吏族」 『釜山史學』 12, 1987.

李惠玉, 「高麗時代の 鄉役」 『梨花史學研究』 17·18, 1988.

羅恪淳, 「高麗 鄉吏의 身分變化」 『國史館論叢』 13, 1990.

姜恩景, 「高麗時期 鄉吏 公服制」 『韓國思想과 文化』 4, 1999.

朴敬子,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2001.

조선초기 향리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麗末鮮初 군현제 개편과 관련하여 향리의 지위가 高麗時期에 비해 하락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²⁾ 향리 상당수가 군현 병합 과정에서 본관을 떠나 토착 기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수령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使役人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상급지배신분인 兩班과 구분되는 하급지배신분으로서 향리를 강조하는 견해는 조선초기 ‘中人’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³⁾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초기 지방통치에서 향리가 담당한 역할과 그 위상을 군현제와 수령제, 나아가 신분제와 관련지어 정리함으로써, 고려 향리와 다른 조선 향리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제도사적 접근의 특성상 향리의 법적 지위와 실제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보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지위 하락의 원인으로 군현 병합에 따른 향리 이동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조선초기 향리 상당수가 그 土着性を 잃어갔음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土着姓인 土姓에서 향리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⁴⁾

반면, 朝鮮時期 각 고을 향리의 首長인 戶長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⁵⁾ 각종 향리 관계 자료에 나타나는 각 고을 호장의 姓氏와 世系를 분석하여, 조선초기는 물론 조선후기에도 호장은 거의 모두 해당 고을 토성 출신이었고 고을 안팎의 土姓 吏族과 通婚하면서 戶長職을 독점 세습하였음을 밝혔다. 조선초기 향리 상당수가 본관을 떠나 토착 기반을 잃었다는 주장과 달리, 각 고을의 주요 토성 이족은 여전히 본관에서 호장직을 세습하고 있었으며 다른 고을에서 옮겨온 吏를 자신과 구분하여 ‘假吏’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향리의 지위가 하락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초 군현 병합에 따른 향리 이동보다는 수령 파견이 향리의 지위 하락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령의 지위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조선초기의 향리를 16세기 이후의 향리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北村秀人, 「高麗末·李朝初期の鄉吏」,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3)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동아문화』 13,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6; 「朝鮮前期 中人層의 成立問題」, 『동양학』 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8.

4) 李成茂, 앞의 논문, 1970, 74~76쪽.

5)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 - 戶長에 대하여」, 『文理大學報』 3, 영남대, 1974.

조선초기 향리의 지위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향리의 지위를 국가가 규정한 법적 지위와 향촌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제 지위로 구분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한 인식을 공통으로 하되, 각자 강조하는 지점에 따라 향리의 지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부세 징수를 비롯한 각종 업무 수행에서 나타나는 향리의 위세를 강조하여 향리를 지배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⁶⁾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위세를 부릴 수 있는 향리는 호장과 六房 등 소수에 그쳤을 뿐 대다수 향리는 일반 양인보다도 못한 처지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

이처럼 조선초기 향리 연구는, 이제 향리 집단 내부의 조직을 고려하고 직임별로 향리의 지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향리 집단 가운데 일부의 특성을 향리 집단 전체로 환원하여 그 지위를 판단하려는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정작 토착 지배층으로서 향리가 고을 민을 지배하는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가 향리 내부 조직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해명되지 않았다. 향리를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로 파악하기보다는 향리가 직임별로 향촌 지배에서 담당할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리 중에서도 토착 지배층으로서 성격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분명하게 유지해온 戶長에 주목하였다. 고려초 지방 호족이 향리로 편입된 이래 향리의 수장으로 존속한 호장은, 그 명칭에서부터 이미 ‘民戶의 長’, 곧 토착 세력의 대표임을 의미하였기에, 호장의 업무 수행은 그 자체가 일종의 지배 행위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호장 연구는 일반 향리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려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⁸⁾ 조선시기 호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초 연구가 유일하다.⁹⁾

6)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의 1장 1절.

7) 崔異敦, 「조선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震檀學報』 110, 2010.

8) 姜恩景, 「高麗後期 戶長層의 變動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尹京鎭, 「高麗前期 鄉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 『韓國文化』 20, 1997.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韓國史學報』 5, 1998.

尹京鎭, 「고려전기 戶長의 기능과 外官의 성격」 『國史館論叢』 87, 1999.

姜恩景,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혜안, 2002.

본고에서는 고려말 호장층의 동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배경으로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가 그 기반을 달리해가는 과정을 밝히되, 특히 世宗 27년(1445)의 田制 개편을 그러한 변화의 주 계기로 파악하려 한다. 나아가, 『掾曹龜鑑』¹⁰⁾과 『慶州戶長先生案』¹¹⁾ 등 각지 향리 집단 스스로가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향리 내부 조직의 변화 또한 파악해 볼 것이다. 호장의 기원이 신라말 지방 호족임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계획한 작업은 신라말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중세 국가의 지방통치 구조와 토착 지배층의 위상이 변화해온 내력 속에, 조선초기 지방통치가 개별 향촌 현실에서 구현된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9) 李樹健, 앞의 논문.

10) 『掾曹龜鑑』은 正祖 元年(1777) 경상도 호장 가문 후손인 李震興이 신라말 이래 향리의 역사를 모아 기록한 史書이다. 본고에서는,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掾曹龜鑑』(底本, 서울시立鐘路圖書館 筆寫本), 元一社, 1982를 활용하였다. 이하 註에서 보이는 쪽수는 모두 해당 책에서 편의상 붙인 쪽수이다.

『掾曹龜鑑』 해제는 李勛相, 「掾曹龜鑑의 編纂과 刊行」 『震檀學報』 53·54, 1982(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수록) 참고.

11) 『慶州戶長先生案』은 高麗 忠烈王 7년(1281)부터 大韓帝國 光武 11년(1907)에 이르기까지 慶州의 역대 首戶長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주시·경주문화원, 조철제 譯, 『(國譯) 慶州先生案』, 세종인쇄사, 2002에 수록된 本을 활용하였다. 이하 註에서 보이는 쪽수는 모두 해당 책의 쪽수이다.

『慶州戶長先生案』 해제는, 尹京鎭, 「慶州戶長先生案 舊案(慶州司首戶長行案)의 분석: 1281~1445 부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9, 2001 참고.

2. 高麗末 戶長層의 分化와 品官層의 擴大

고려의 향리는 신라말 지방 호족에서 기원하였다. 지방 호족들은 각자 中央官制를 모방한 독자적 官制, ‘官班’을 설치하여 割據地를 지배하였다.¹²⁾ 後三國 통일 이후, 고려 정부는 服屬하지 않는 지방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 호족들 각자가 할거하고 있던 지역을 本貫, 곧 貫鄉으로 승인해주었다.¹³⁾ 성종 2년(983), 12牧에 外官이 파견되고 州府郡縣의 吏職이 改定됨에 따라, ‘관반 지배층’이었던 호족은 제도 안으로 편입되어 鄉吏로 자리 잡았다.¹⁴⁾ 이때 관반의 수장인 堂大 등이 戶長으로, 大 등이 副戶長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예하 부서와 관리도 비교적 일관된 명칭인 司와 正·史로 개정되었다.¹⁵⁾

그러나 외관이 파견된 후에도 대다수의 고을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그 고을 民戶의 長인 호장이었다. 고려초에는 외관이 파견된 고을 자체가 지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고을 내에서 외관의 위상 또한 높지 않았다. 羅末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향리의 역사를 모은 『掾曹龜鑑』의 저자는, 羅末麗初에 호장이 고을 일을 처리하고 고을 民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외관은 다만 호장의 고을 지배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¹⁶⁾ 실제로도 7·8품의 하급 관원으로서 고을에 새롭게 부임한 외관 개인이 본관에서 대대로 民을 지배해온 호장 집단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다.¹⁷⁾

12)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1979.

13)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4b(216)쪽.

“江陽李氏譜 云麗太祖并吞三韓之後 非但羅朝大臣 多有不服者 羅臣之散居外邑者 爲土豪難化 麗祖患之 遂各於其地 設鄉職 封戶長 鑄給印信 雖貶而以示不忍永絕之意 仍使諸郡戶長之子孫 爲其人 分番侍衙 卽古質子之意也”

고려초기 본관제 성립에 관해서는, 蔡雄錫, 「新羅末 高麗初期 지방사회의 변동과 본관제의 성립」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참고.

14) 姜恩景은 ‘鄉吏’라는 용어 자체도 향리 집단 내부의 계층화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지적하였다(姜恩景, 앞의 책, 14쪽).

실제로 『高麗史』를 비롯한 중앙 자료에서는 ‘戶長’ 혹은 ‘長吏’라는 용어보다는 ‘鄉吏’, ‘外吏’, ‘邑吏’ 혹은 ‘고을명+吏’라는 용어가 훨씬 자주 보인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용어로 지칭되는 존재들 가운데 호장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5)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成宗 2年 月 未詳.

16)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3b(214)쪽.

호장의 집무처는 이른바 ‘邑司’였다.¹⁷⁾ 首戶長은 호장 집단의 首位者로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읍사 印信을 가지고 각종 공무를 처리하였다. 읍사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民戶 파악을 통한 부세 징수였고, ‘戶’ 계열 향리인 戶正과 副戶正이 호장 예하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호장은 읍사 전체의 수장 집단인 동시에 ‘戶’ 계열의 수장 집단이었으므로, 민호 파악과 부세 징수는 호장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었다. 호장은 본래 국가에서 정한 부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들이고,¹⁸⁾ 나머지 차액을 취하여 吏職 수행에 대한 급료를 대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세 징수를 포함한 지방 행정을 읍사에 일임하다시피 했던 고려 정부는, 호장의 부세 ‘橫斂’을 일종의 비공식적 급료로 보아 얼마간 묵인해주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나 외관 차원에서 제재를 시도했는데,²⁰⁾ 그러한 시도마저 호장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明宗 6년(1176), 향리가 법에 맞지 않는 斗槩를 가지고 稅를 많이 거둔다는 이유를 들어 쌀 1석당 耗米를 합쳐서 17斗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群小의 반응이 흉흉하자 制를 거두다시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¹⁾ 舊來의 收稅 관행을 고수하려는 호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것이다.²²⁾

17) 고려 현종 9년(1018)에 제정한 長吏 公服 규정에서, 호장의 공복은 紫衫으로 (『高麗史』 卷72, 志26, 輿服1, 冠服, 長吏 公服, 顯宗 9年 月 未詳), 중앙의 경우 5품 이상 고위 관직에 해당하는 服色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姜恩景은 文宗 때부터 파견된 縣令·縣尉가 7·8품직으로서 綠衣와 木笏만을 허용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외관을 통한 호장 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姜恩景, 앞의 논문, 1999).

18) ‘邑司’는 연구자들이 州司·府司·郡司·縣司 등의 總稱으로 사용하는 造語로, 중국 唐과 신라 자료에서 나타나는 食邑 관할 기구로서 읍사와는 다른 것이다. ‘읍사’에 관해서는 李樹健, 「高麗時代 ‘邑司’ 研究」, 『國史館論叢』 3, 1989 참고.

19) 『高麗史』 卷107, 列傳20, 諸臣, 權坦.

20) 정부는 부세 징수의 원칙을 강조하거나(『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仁宗 5年 3月), 호장이 횡령의 구실이나 수단으로 삼을 만한 요소를 제거하였다(『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正月). 또한, 외관은 현종 9년(1018)에 새롭게 정한 ‘외관의 奉行 6조’에 따라(『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수령의 등용, 顯宗 9年 2月), 호장의 能否와 향리의 錢穀 散失을 살폈다.

2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明宗 6年 7月.

22) 후대의 일기기는 하나, 光武改革期 향리 또한 자신을 징세조직에서 배제하는 지방제도 개혁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개혁 방침을 무시하고 기존의 收稅 관행을

그러나 정부와 중앙 권세가의 외방 侵奪이 본격화된 원 간섭기에 이르러, 호장의 부세 징수 권한은 무거운 책임이 되었다. 對蒙戰爭이 발발한 이래, 고려 정부는 전쟁 비용은 물론 對元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세인 ‘科斂’을 남발하였다. 과렴은 대개 기한이 촉박하여²³⁾ 물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민뿐만 아니라 징수와 輸納을 책임지는 향리에게도 苦役이었다. 忠烈王 7년(1281)에는 원의 일본 원정에 필요한 軍馬 草料의 운송 기한을 맞추지 못한 慶尙道 高丘縣吏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²⁴⁾

대몽전쟁기 田柴科 운영이 마비됨에 따라 수조지를 분급받지 못하게 된 중앙 권세가가 外方에 農莊을 이루면서 부세 징수는 더욱 고역이 되었다. 권세가가 影占하는 田民이 많아질수록 징수 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곤란한 상황은 권세가가 納稅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그러한 경우 향리와 백성이 권세가가 내지 않는 田稅의 액수를 대신 채워 넣기도 했다. 그러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끝내 생업을 잃고 逃亡·流亡하는 것이었다.²⁵⁾

향리 중에서도 호장층보다는, 家風이 호장층에 미치지 못해²⁶⁾ 현실적으로 호장직에 오르기 어려웠던 ‘次吏’層이 고역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⁷⁾ 읍사에서 對民 업무 등 행정 실무를 맡았던 吏를 ‘차리’층으로 볼 수 있다. 吏는 업무상 권세가로부터 직접 부세를 징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회적 지위는 낮아서 권세가의 횡포에 대처하기가 더욱 곤란했을 것이다. 실제로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人吏姓과 次吏姓·百姓姓의 亡姓率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차리성·백성성 중 망성이 된 비율이 약 1/3로 나타나 호장층에 해당하는 인리성의 망성률 1/5보다 높았음이 확인되고 있다.²⁸⁾

고수하였다(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299~343쪽).

23)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3, 忠烈王 21年 4月.

24)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 7年 正月.

25)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忠肅王 5年 5月.

26)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文宗 5年 10月.

27) ‘次吏’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次吏姓’에서 따온 것이다. 姜恩景의 견해에 따르면, 고려 후기 호장층은 ‘人吏姓’으로, 향리이지만 家風이 호장층에 미치지 못한 계층은 ‘次吏姓’ 또는 ‘次姓’으로, 토착 지배층이지만 향리직에 오르지 못했던 계층은 ‘百姓姓’으로 표현되었다(姜恩景, 앞의 책, 140~150쪽).

충렬왕 원년(1275), 納粟補官 제도가 시행되는 등²⁹⁾ 관직 제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관직을 불법으로 冒受하여 역을 피하는 향리들도 많아졌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충렬왕에 이어 즉위한 忠宣王은 자신의 즉위 교서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관직을 모수한 향리를 還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州府郡縣의 향리·백성이 권세가에 의탁해 軍을 거느리지 않는 散員職을 많이 받으며, 혹은 入仕해 上典이 되어서는 백성을 侵漁하고 관원을 陵冒한다. 마땅히 按廉使와 所在官으로 하여금 직첩을 거두고 本役에 채우도록 하라.³¹⁾

충선왕은 정8품 散員職을 冒受한 향리를 본역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開京 所在 향리 가운데 정7품 別將 이하 관직을 받은 자도 환본하였다.³²⁾ 향리는 자기 자신이 권세가에 의탁하여 관직을 모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역을 면하도록 하였다.³³⁾ 이처럼 累代에 걸쳐 관직을 얻을 경우 해당 가문은 吏族에서 士族으로 분화·이행하였다.³⁴⁾

비슷한 시기, 檢校職을 冒受하는 향리 또한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었다. 검교직은 본래 文官 5품, 武官 4품 이상의 관직에 설정된 散職이었는데, 고려후기에는 하급 무관직에도 설정되어 향리의 避役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향리가 얻은 관직에 검교직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 얻은 관직이라면 實職이 아닌 散職(虛職)이었다.³⁵⁾ 향리가 권세가에 의탁하여 관직을 받은 경우에도, 그가 다른 사람의 實職을 빼앗지 않은 이상은 정원 외의 산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28) 姜恩景, 위의 책, 148~149쪽.

29)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納粟補官之制, 忠烈王 元年 月 未詳.

30) 姜恩景은 향리가 권세가에 의탁해 받은 관직이 納粟補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직과 일치함을 지적하였다(姜恩景, 앞의 책, 207쪽).

31)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 忠烈王 24年 正月, 忠宣王 卽位 敎書.

32)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 卽位年 4月.

33)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忠肅王 12年 月 未詳.

34) 吏族의 분화에 관해서는, 李樹健, 「麗末鮮初 土姓吏族의 성장과 분화 - 安東權氏를 중심으로」,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일조각, 1994 참고.

35) 散職에 관해서는, 박용운, 『高麗時代 官階·官職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28~33쪽 참고.

恭愍王 3년(1354), 添設職이 설치되면서 受職 통로는 더욱 넓어졌다. 첨설직은 본래 ‘賞軍政’이라 하여 군공 포상의 목적으로 준 관직이었으나,³⁶⁾ 전쟁의 장기화로 모병 자체가 곤란해지면서 군공과 상관없이 남발되었다. 공민왕 10년(1361)에는 모병에 응하는 향리 모두에게 관직을 주었고,³⁷⁾ 왜구가 한창 성하였던 동왕 23년(1374)에는 왜구를 방어할 대책을 올린 檢校中郎將 李禧와 中郎將 鄭准提의 伴尙 수십 명에게 첨설직을 주었다.³⁸⁾ 반당은 곧 ‘麾下士’로,³⁹⁾ 역시 향리가 대다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향리 중에서도 호장층은 권세가에 뇌물을 바칠 만큼 경제력이 있었고⁴¹⁾ 그 고을 토성 출신 권세가들과도 혈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次吏’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직 취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원 간섭기 호장 중에서는 스스로 권세가에게 投託한 후에 외방의 農莊에서 民의 토지를 빼앗거나 長利를 거두는 등⁴²⁾ 수탈을 맡은 이들도 있었는데, 것처럼 권세가의 ‘私人’이 될 경우에는 관직을 얻기가 더욱 쉬웠을 것이다. 공민왕 때 武將의 伴尙으로서 첨설직을 받았던 자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주부사의 역대 수호장 명단을 기록한 『慶州戶長先生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말 호장층 출신으로서 산직을 가진 자들이 발견된다.

- 戶長正朝 孫邈(1375년 掌印)의 外祖 檢校軍器監 鄭瑞⁴³⁾
- 戶長正朝 李龍(연도 누락, 1384~88년 사이)의 外祖 檢校軍器監 李榮⁴⁴⁾
- 戶長正朝 金敏(1398년 掌印)의 外祖 別將同正 金演⁴⁵⁾

36)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添設職, 恭愍王 3年 6月.

37)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恭愍王 10年 10月.

38) 『高麗史』 卷83, 志37, 兵3, 船軍, 恭愍王 23年 正月.

39) 『高麗史』 卷113, 列傳26, 諸臣, 李禧. 고려 후기 반당에 관해서는, 禹熙女, 「朝鮮前期의 伴尙制와 假伴尙問題」,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참고.

40) 鄭杜熙, 「高麗末期의 添設職」 『震檀學報』 44, 1977, 44~46쪽.

41)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烈王 11年 3月.

42)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穆王 元年 5月.

43) 『慶州戶長先生案』, 290쪽.

44) 『慶州戶長先生案』, 293쪽.

45) 『慶州戶長先生案』, 295쪽.

고려 정부는 호장층의 관직 취득을 ‘次吏’層의 도망·유망과 마찬가지로 ‘역을 피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그로 인한 지방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였다. 그러나 호장층의 관직 취득은 비록 산직이더라도 관직을 얻는 것이었기에 여타 ‘避役’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졌다. 호장층의 관직 취득은 鄉의 영역적 위상이 하락하고 ‘吏職’이 ‘吏役’으로 규정되어가는 상황에서, ‘향리’에 머물지 않고 ‘官吏’, 곧 품계를 가진 品官이 되어 지배층의 지위를 회복 혹은 유지·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피역은 부산물일 뿐이었다. 호장층의 관직 취득 시도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본래 호장은 본관에서 명실상부한 지배자로 위치하였다. 비록 신라말처럼 官을 자처하진 못할지라도, 호장은 엄연히 ‘鄉’의 ‘吏’였다. ‘吏’는 본래 중국에서 ‘治人者’, ‘所以治民’, ‘民之所懸命’으로 정의되었고,⁴⁶⁾ 우리나라의 향리 또한 마찬가지로 ‘吏’를 ‘古之治人者’로 인식하고 있었다.⁴⁷⁾ 물론 ‘吏’에도 大小와 貴賤이 있지만 ‘理’(治)에서 나온 점에서는 같으므로 ‘鄉’의 ‘吏’인 ‘향리’는 그 명칭부터 이미 理를 실현하는 治者라는 인식이었다. 고려 정부조차 외관이 아닌 호장을 한 고을의 ‘長吏’로 칭한 것을 고려할 때, ‘治者’로서 호장의 위상은 단순히 자기 인식에 그친 것만은 아니었다.

고려 정부는 ‘治者’로서 호장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대우하였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에 복속한 호족에게 元尹(6품) 이상 大匡(3품) 이하 官階를 내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호장에게도 ‘鄉職’ 官階를 내려주었고,⁴⁸⁾ 官階에 따라 田柴科의 第12~14科에 해당하는 田·柴地를 지급하였다.⁴⁹⁾ 또한, 吏職을 맡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職帖과 職田을 내려주었고, 병든 지 100일이 되면 중앙 관원의 예에 따라 罷職하고 직전을 거뒀다.⁵⁰⁾ 70세가 되어 은퇴한 安逸戶長 또한 원래 받던 직전의 절반을 받았다.⁵¹⁾

46) “吏 治人者也(『說文解字』)”, “吏 所以治民也(『漢書』「惠帝紀」)”, “吏者 民之所懸命也(『管子』「朋法」)”, “夫吏者 理也(『漢書』「王莽傳」下)”

47) 『掾曹龜鑑』 卷1, 跋, 6a(197)쪽. “古之治人者 曰吏”

48) 본래 고려에 귀부한 호족에게는 京·鄉을 구분하지 않고 官階를 내렸는데, 성종 때 중국식 관계를 채택하면서 京職과 鄉직이 구분되었다(박용운, 앞의 책, 33~43쪽).

49)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文宗 30年 月 未詳.

50)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顯宗 16年 2月.

고려 정부가 호장을 대우할 때 중앙 관원과 큰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호장층이 중앙 관원의 주공급원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다. 고려초 이래 界首官試를 통해 선발된 ‘鄉貢’이나 鄉校 학생은 주로 호장층의 자제였다.⁵²⁾ 光宗初 科擧制가 시행된 이후, 호장층의 자제들은 製述業과 明經業을 통해 바로 품관이 되거나⁵³⁾各司 胥吏職으로 入仕하여 품관으로 진급하였다.⁵⁴⁾ 성종 6년(987), 12목에 각각 經學博士 1명과 醫學博士 1명을 差遣하여 長吏[호장]의 자제 가운데 가르칠 만한 이가 있으면 가르치도록 한 것도⁵⁵⁾ 결국 지방 세력의 자제를 교화하여 관료 조직 내로 편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려초 지방 호족, 특히 옛 신라 영역에 해당하는 경상도 호족 상당수가 중앙 관원으로 진출하기보다 본관에 남기를 선택한 것과 같이,⁵⁶⁾ 호장층 자제 중에는 본관에서 그대로 호장직을 세습하는 자들도 많았다. 성종은 호장층이 그 자제를 중앙 관원으로 보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늘 아침 이익만 보고, 다른 날의 榮華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호장층이 오직 家産 경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었다.⁵⁷⁾

이처럼 고려초 호장층에게 중앙 관직이란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였다. 金宗直의 문집 『佔畢齋集』에 따르면, 후삼국 통일 초기에 호장 출신으로서 戰功을 세워 관직이 侍中, 官階가 大匡(1품)에 이른 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본관의 풍속이 해이해지자 大官을 사직하고 도로 호장이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善州 호장으로서 모병에 응해 시중 대광이 된 金宣弓의 경우, 그가 죽은 후 장남 奉術이 爵을 세습하고 차남 文奉은 호장이 되었는데, 이후 문봉의 후손 중에는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하는 이들도 있었고 본관 선주에서 그대로 호장직을 세습하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었다.⁵⁸⁾

5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穆宗 元年 月 未詳.

52) 허홍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191쪽.

53) 『高麗史』 卷73, 志27, 選舉1, 科目 1, 文宗 2年 10月.

54) 金光洙, 「高麗時代의 胥吏職」, 『韓國史研究』 4, 1969의 2장 참고.

55)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6年 8月.

56) 朴敬子, 앞의 책, 93~108쪽.

57)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6年 8月.

58) 『佔畢齋集』, 彝尊錄 上, 先公譜圖 第一.

김종직 또한 吏族의 후손이라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호장층이 장기간에 걸쳐 중앙 관원과 향리로 분화해간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특정 고을·가문 출신이 중앙과 지방 양쪽에 모두 존재하게 된 것은 지방 세력의 반란을 염려하던 고려 정부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元宗 때 咸州의 民들이 반란을 모의하자, 국왕이 京官 趙德과 尹敦을 보내 “卿들의 자손들 중에서 在京者는 京職을 맡고, 在鄉者는 鄉職을 맡는다면, 함주 민들의 叛意가 없으리라”⁵⁹⁾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었다. 가문 내의 재경자가 재향자의 叛意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재경자와 재향자, 곧 중앙 관원과 향리 사이에 존재한 균형과 견제는 양자가 지배층 존립의 두 가지 기초 요소를 分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앙 관원은 정치 권력을, 향리는 토착 기반을 자기 존립의 기초로 하여,⁶⁰⁾ 각각 자신의 영역인 京과 鄉에서 治者, 곧 지배층으로서 위치했던 것이다. 비록 같은 가문 출신이라 하여도 각자의 지배 영역은 不可侵한 것이었기에, 지배 영역에 대한 침범이 있을 경우 양자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명종 8년(1178), 淸州 사람들과, 청주 사람으로서 개경에 籍을 두었다가 청주로 돌아온 사람들이 충돌해 백여 명이 죽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⁶¹⁾

그러나 양자 간 균형은, 본래 하나였던 京職과 鄉職 官階가 구분되는 등 鄉의 영역적 위상에 변화가 나타난 成宗初 이후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제 고려 정부는 각 고을을 지방 호족의 본관, 곧 貫鄉으로 파악하기보다, 京官인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직접 통치해야 할 ‘外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睿宗 元年(1106)에는 屬縣에 최하급 외관인 監務가 파견되기 시작하였고, 70년 후인 명종 6년(1176)까지 100개가 넘는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특히, 명종 때에는 무신 권력의 확대와 관련해 감무가 대거 증파됐는데,⁶²⁾ 자질이 낮은 신임 관원이 외관이 되어 外方民을 수탈하는 일도 잦았다.⁶³⁾

59)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5b(218)쪽.

60) 金光洙, 「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兩班戶籍整理」, 『歷史教育』 35, 1984, 40~41쪽.

61) 『高麗史』 卷100, 列傳13, 諸臣, 慶大升;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8年 3月.

62)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367~371쪽.

63) 『高麗史節要』 卷13, 明宗2, 明宗 16年 8月.

이처럼 고려 정부가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외방을 직접 통치하려 했다면, 일부 중앙 관원은 외방을 수탈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원 간섭기 중앙 권세가의 외방 침탈은 바로 이러한 맥락 위에 놓여 있었다. 권세가의 田民 影占은 부세 징수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문제였지만, 호장의 입장에서는 권세가가 그동안 호장의 공적 지배 하에 있었던 田民을 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호장이 주도하던 기왕의 지배 질서를 동요시키고, 고을 향리와 백성, 일반 민이 수탈을 견디다 못해 도망·유망하게 함으로써 지배층으로서 호장의 존립 기초를 침식시키고 있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였다.

권세가의 외방 침탈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農莊 형성의 기초가 된 收租地(私田)·所有地의 확보 자체가 중앙 관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 권력 및 특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신집권기 이래 관료 조직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중앙의 기성 사족들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고려초부터 중앙 관원의 주공급원이었던 호장층이 주요 견제 대상이 되어, 향리의 아들 셋 중 한 명에게만 從仕를 허락하는 ‘三丁一子’가 강조되었고⁶⁴⁾ 실제로 과거 합격자 중 향리 출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⁶⁵⁾

향리가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을 얻는 것을 견제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향리가 수행하는 지방 행정 업무를 吏役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향리는 본래도 대대로 본관에 토착하며 吏職을 세습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그 직을 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다. 향리의 아들은 ‘삼정일자’ 규정에 따라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伍尉의 군인이나 승려가 되는 것도 제한되었다.⁶⁶⁾ 고려말 정부가 향리의 도망과 유망, 관직 취득을 모두 ‘避役’으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향리를 하나같이 본역으로 돌려보내려 한 것은 이러한 禁令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64) “國制 吏有子三 許一子從仕(『高麗史』 卷106, 列傳19, 諸臣, 嚴守安)” ;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辛禡 9年 2月.

65) 자료상에서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향리의 수는 명종~원종 때에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허흥식, 앞의 책, 206~207쪽).

66) 『高麗史』 卷75, 志29, 選舉13, 銓注, 鄉職, 忠宣王 4年 月 未詳;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肅王 12年 2月 및 恭愍王 5年 6月.

이처럼 鄕의 영역적 위상과 吏職의 위상이 더불어 하락하는 상황에서, 충렬왕 24년(1298) 무렵에는 그동안 호장이 받던 향직마저 사라져갔다.⁶⁷⁾ 이때 호장이 산직이라도 관직을 얻으면 “上典이 되어 관원을 능멸하고”⁶⁸⁾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해도 수령이 어찌지 못하는”⁶⁹⁾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예컨대, 고려말 散官들은 사적인 행차에도 驛馬를 타고 館과 驛을 드나들며 國廩을 받았는데,⁷⁰⁾ 호장 또한 품관이 된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관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數多한 상황에서, 호장층에게 관직을 얻는 것은 전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관직을 얻은 이상, 일반 호장에 비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鄭道傳의 문집 『三峯集』에 실린 父 鄭云敬의 行狀에 따르면,⁷¹⁾ 정운경이 忠惠王 5년(1344) 福州牧 判官으로 옮겼을 당시 그곳 호장 權援이 일찍이 향교에서 운경과 同遊하던 벗으로서 저녁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찾아왔다. 이때 운경은 “지금 자네와 더불어 술을 마시는 것은 옛 정을 잊지 않음이나, 내일 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판관으로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판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였다. 운경 역시 호장층 출신이나⁷²⁾ 판관이 된 이상 전에 交遊했던 일반 호장과는 지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호장층이 관직을 얻고자 했던 목적이 단순 避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배층으로서 지위 회복에 있었다는 점은, 慶尙道 寧海府 戶長 成節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성절은 上計吏로서 都堂에 호소하여 邑格을 올린 공로로 고을 사람들에게 免役을 허락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그것을 사양하였다.

67) 박용운, 앞의 책, 52쪽.

고려 후기 호장이 제수받은 대표적인 향직은 正朝(7품)였다. 고려시기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戶長正朝’라는 표현은 正朝를 받은 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68)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 忠烈王 24年 正月.

69) 『高麗史』 卷75, 志29, 選舉17, 銓注, 鄕職, 辛禍 9年 2月.

70) 『高麗史』 卷82, 志36, 兵2, 站驛, 辛禍 14年 7月.

71) 『三峯集』 卷4, 行狀, 高麗國 奉翊大夫 檢校密直提學 寶文閣 提學 上護軍 榮祿大夫 刑部尙書 鄭先生 行狀.

72) 운경의 曾祖父는 安東府 奉化縣 戶長 公美, 祖父는 秘書郎同正 英粲, 父는 檢校軍器監 均으로, 운경의 가문 역시 吏族에서 검교직과 동정직 등 散職 제수를 통하여 士族으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성절이 말하기를, “저는 이제 늙어서, 비록 제 역을 면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士가 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 아들과 손자를 면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牌에 서명을 해서 주었으므로, 그 아들인 學如와 그 손자인 天富는 모두 鄉에서 역을 지지 않았다.⁷³⁾

성절의 목적은 免役 자체가 아니라 면역을 통해 士가 되는 것이었기에, 늙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면역시켜달라고 한 것이었다. 이때 면역을 허락해주었던 주체는 “고을 人士로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 및 퇴직 등으로 “鄉에居하고 있는 자”로 나타난다. 이미 향리의 면역 여부조차 士로서 관직을 경험해 본, 전·현직 품관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호장층 역시 대개는 관직을 얻고도 鄉에 머무르는 ‘留鄉品官’이 되었다. 유향품관은 이미 지배층의 두 가지 존립 기초, 곧 정치 권력과 토착 기반을 모두 갖춘 상태였기에, 관직을 얻더라도 굳이 上京從仕할 필요는 없었다. 雜業과 같은 합법적 경로를 통하여 관직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⁷⁴⁾ 본래 중앙 관원이던 자도 고려말 정치적 혼란 속에 낙향해오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려말 호장층이 분화하여 그 일부가 품관층으로 흡수됨에 따라, 품관층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호장층 출신의 품관들은 앞서 언급했듯 주로 散職을 취득하였으므로, 향촌에서 ‘閑散’이라 불리기도 했다.⁷⁵⁾

호장층 출신이지만 호장직을 세습하지도, 관직을 얻지도 않은 상태로 향촌에서 한가로운 삶을 영위하며 ‘閑良’의 일종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은 호장층 출신으로서 역을 면한 자들이 ‘한량’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일단 역을 면했기에 대를 이어 호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학문이나 무예를 닦으며 한가로이 생활할 수 있었다. 공민왕 때 향리와 함께 모병에 응해 첨설직을 얻은 ‘士人’⁷⁶⁾ 또한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듯하다.⁷⁷⁾

73) 『東文選』 卷101, 司宰少監 朴强傳.

74)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辛禡 9年 2月.

75) 호장층의 在地閑散化에 관해서는, 姜恩景, 앞의 책, 5장 1절 참고.

76)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恭愍王 10年 10月.

“募兵 凡應募者 除私賤外 士人 鄉吏 官之 宮司 奴隸 良之 或賞錢帛 聽其自願”

물론 호장층 출신으로서 품관이 되지 않고 호장이 된 경우도 많았으며, 吏民이 모두 떠나간 고을에 홀로 남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호장도 있었다. 14세기 초, 忠淸道 珍同縣을 다시 찾은 李穀은, 본래 ‘草萊’라고 부를 만큼 황폐했던 고을을 호장이 복구해놓은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至治 연간에 일로 인해 진동현에 왔는데, 몇 채 없는 가옥이 무너져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미 [사람들이] 유망하여 다시는 人家에서 밥 짓는 연기를 볼 수 없겠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맞이하는 吏도 있고 응접하는 장소도 있기에,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姓은 陳, 이름은 臣老, 職은 호장인 자’가 능히 폐허를 고쳐서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⁷⁷⁾

위에서 언급된 호장 陳臣老의 사례에서, 다른 고을에도 ‘민호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호장으로 머무른 경우가 있었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요컨대, 고려말 향촌에는 호장층 출신의 품관과 한량, 호장이 공존하였다. 같은 가문 호적 안에 품관과 한량, 호장이 공존하는 많은 사례를 볼 때,⁷⁹⁾ 삼자는 아직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신분이면서 토착 지배층으로서의 속성을 공통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호장 가문이 이후 累代에 걸쳐 관직을 얻어 士族이 될 경우, 해당 가문은 吏族에서 분화되어 在京 士族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고려말 개혁과 사대부 또한 호장층의 관직 취득이 여타 ‘避役’ 방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禡王 9년(1383), 權近 등은 “여러 業의 출신자들이 그 鄉에 돌아가 앉아서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해도 수령이 어찌지 못하니, 이로 인해 주현에 겨우 몇 명 있는 향리들에게도 모두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⁸⁰⁾고 우려하였다.

77) 향리와 士人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은 士人이 吏族과 통혼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高麗史』 卷121, 列傳34, 烈女, 鄭滿 妻 崔氏).

78) 『稼亭集』 卷20, 律詩.

79) 姜恩景, 앞의 책, 211~216쪽 참고.

80)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辛禡 9年 2月.

이에 개혁과 사대부는 향리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관직을 얻은 향리를 파직하고 환본시키고자 하였다. 恭讓王 원년(1389) 12월, 大司憲 趙浚이 향리의 관직 취득을 염려하며, 과거와 군공 등으로 역을 면한 향리 중 免役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자는 첨설직 2품 이하, 實職 3품 이하에 한해 환본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⁸¹⁾ 이러한 조처를 통해, 관직을 冒受한 자들 중 일부는 다시 향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관직의 모수 여부를 모두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향리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관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공양왕 2년(1390) 7월, 都評議使司에서 건의한 兩班 戶籍 정리는,⁸²⁾ 고려말 확대된 품관층에서 향리 출신을 분리해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양반 호적이라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大小 兩班과 향리의 戶口를 작성하고 호구가 없는 양반의 경우 관직을 제수 받더라도 出仕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반과 향리를 구분하고 향리가 양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 양반 호적 정리는, 국왕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완수되지 못하였다. 결국 양반과 향리의 구분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시행되었던 科田法上에서, 양반 사대부는 居京과 6道로 분리되어 각각 科田과 軍田을 절급받았으며 향리는 기존 액수를 기준으로 덜거나 더하여 정한 鄉吏田을 절급받았다.⁸³⁾ 품관과 향리의 완전한 분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81)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恭讓王 元年 12月.

82)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戶口, 恭讓王 2年 7月.

83)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恭讓王 3年 5月.

3. 國初 地方統制의 強化와 戶長의 鄉村支配

조선 건국세력은 고려말부터 外官制를 중심으로 지방통제를 강화하였다. 昌王 卽位年(1388) 8월, 品秩이 낮았던 按廉使를 都觀察黜陟使로 고치고 兩府의 大臣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듬해부터는 별도의 제수 절차를 마련하여 觀察使 임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⁸⁴⁾ 전임 관찰사제를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에는 명종 6년(1176) 이후 부분적으로만 시도되었던 감무 파견이 대규모로 재개됐으며, 이후 3년간 계속 감무가 증파되었다.⁸⁵⁾ 또한, 공민왕 때부터 감무의 품질과 자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된 끝에⁸⁶⁾ 우왕 때에 감무의 품계가 기존의 7·8품에서 6품으로 승급되었다.⁸⁷⁾

외관제의 강화는 군현제의 개편과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었다. 감무의 증파는 군현 구성상 속현 등 임내가 감소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조선초기 정부는 이처럼 외관 증파에 주력한 고려말 정책 방향에서 나아가, 군현 併·廢합을 통해 군현 수를 줄이고 외관을 신중히 파견하려 했다.⁸⁸⁾ 토지와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군현의 名號와 등급을 고친 太宗初 이래,⁸⁹⁾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군현을 두 곳씩 병합하여 새로운 군현을 만들거나⁹⁰⁾ 속현과 鄉·所·部曲을 本官인 주현에 합쳐 혁파하는 작업이 계속됐으며,⁹¹⁾ 世宗 때에는 외관 확보 문제와 관련해 군현 병합이 활발히 논의되었다.⁹²⁾

84) 『高麗史』卷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85) 金東洙, 「고려 중·후기의 監務 파견」, 『全南史學』 3, 1989.

86) 『高麗史』卷75, 志29, 選舉3, 銓注, 凡選用守令, 恭愍王 8年 月 未詳.

“恭愍王八年 全以道請 監務縣令 專任文士 舊制 監務縣令 皆用登科士流 近世 專以 諸司胥吏爲之貪汚虐民 且階皆七八品 秩卑人微 豪强輕之 恣行不法 鄉邑殘弊”

87) 『高麗史節要』卷33, 辛禍4, 辛禍 14年 8月.

88) 『世宗實錄』卷66, 世宗 16年 11月 18日 壬辰.

“前朝之季 率以吏典去官參外秩卑者 爲守令 故庸瑣不法 太祖爰念此弊 先革支縣 定爲州郡之額 慎簡賢能以差遣之”

89) 『太宗實錄』卷6, 太宗 3年 閏11月 19日 壬戌; 『太宗實錄』卷26, 太宗 13年 10月 15日 辛酉.

90) 李樹健, 앞의 책, 401~402쪽 참고.

91) 『世宗實錄』卷151, 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太宗九年 以都觀察使尹向陳言 道內縣鄉所部曲 皆合于本官”

그러나 국초 군현 병합이 정부의 의도처럼 속속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군현 병합에는 해당 고을 향리 및 官奴婢의 이동이 반드시 수반되었기에, 무리하게 병합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고을 행정에 차질을 줄 수 있었다.⁹³⁾ 병합 대상 군현의 토착 지배층은 이러한 구실을 내세워 병합에 반대하였고, 병합 후에도 끊임없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며 군현 復設을 요구하였다.⁹⁴⁾ 이에 이미 병합한 군현 두 곳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⁹⁵⁾ 이처럼 군현 병합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존의 군현은 대체로 보존되었고⁹⁶⁾ 각 군현 토착 지배층의 존립 기반이나 위상 또한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고을 내에서 외관인 수령의 위상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태종 때 각 고을 鄉愿이 수령을 헐뜯는다는 이유로 유향소를 혁파하고⁹⁷⁾ ‘향원을 推劾하는 법’에 따라 향원을 감찰하여 다스리도록 한 것이나,⁹⁸⁾ 세종 때 部民告訴禁止法·元惡鄉吏處罰法·守令久任法 등을 시행한 것은⁹⁹⁾ 당시 수령의 위상이 토착 지배층의 그것에 비해 약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토착 지배층의 謀害로 신임 수령이 연이어 죽는다는 狀告도 분분하였다.¹⁰⁰⁾ 그리하여 토착 지배층의 勢가 강한 고을에서는 수령이 오히려 품관과 향리의 환심을 사려 하였고,¹⁰¹⁾ 수령의 업무를 그들에게 위임하기까지 했다.¹⁰²⁾

92) 세종대 군현 병합 논의에 관해서는, 李樹健, 앞의 책, 404~407쪽 참고.

93) 『世宗實錄』 卷69, 世宗 17年 7月 22日 辛卯 中 忠淸·慶尙 監司의 啓.

94) 『文宗實錄』 卷4, 文宗 卽位年 10月 10日 庚辰.

“我朝前此 并合郡縣 土姓巨族 吏民訴其并合不便事由 紛紜不止 尋復罷之”

95) 『太宗實錄』 卷32, 太宗 16年 7月 30日 己未.

96) 李樹健, 앞의 책, 410쪽에 수록된 〈표 7-6〉에 따르면, 조선초기 주현 수는 대체로 태종 13년(1413) 군현 개편 때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世宗實錄』 地理志가 편찬된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음에도 각각에 실린 주현 수(336개, 331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시기 속현 수가 107개에서 72개로 비교적 크게 감소한 사실을 고려한다면(같은 책, 392쪽의 〈표 7-5〉 참고), 조선전기 군현제 개편은 주현 간 병합보다 속현을 비롯한 임내의 폐합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97)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6月 9日 丁卯.

98)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10月 17日 乙巳.

99) 외관의 지위강화 정책에 관해서는, 李樹健, 앞의 책, 375~381쪽 참고.

100) 『世祖實錄』 卷15, 世祖 5年 正月 23日 丙午.

101)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12月 20日 乙巳.

102) 『世宗實錄』 卷2, 世宗 卽位年 11月 3日 己酉.

정부가 가장 경계한 것은, 토착 지배층이 양민을 影占하는 것이었다.¹⁰³⁾ 태종 6년(1406), 左政丞 河崙 등은 다음과 같이 그 民弊를 지적하였다.

품관과 향리가 田土를 널리 점하고, 流亡人을 불러들여 竝作半收하니, 그 폐가 私田보다 심합니다. … 流移者는 이에 의지하여 역을 피하고 影占者는 이에 의지하여 받아들여 숨기니, 부역이 不均함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¹⁰⁴⁾

하륜 등은 품관과 향리가 유망인을 토지에 불러들여 병작반수하는 것을 고려말 私田 문제에 비교하면서도, 병작의 폐단을 그보다 심각하게 여겼다. 양민을 영점하여 부세를 거두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지만, 병작 1결에서 거두는 양이 사전 1결에서 거두는 양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폐를 끼치는 품관과 향리를 각각 ‘鄉愿’과 ‘元惡’으로 표현하고¹⁰⁵⁾ 때때로 감찰이나 敬差官을 보내 그들이 民을 侵漁하는지 살폈다.¹⁰⁶⁾

정부는 이처럼 토착 지배층으로서 품관과 향리를 아울러 파악하면서도 고려말에 미처 완수하지 못했던, 품관과 향리의 구분 작업을 계속하였다. 太祖 元年(1392)부터 향리로서 登科하거나 공을 세운 것이 분명한 자 외에 本朝의 通政大夫 이하, 前朝의 奉翊大夫 이하를 本役に 돌려보내는 등¹⁰⁷⁾ 원 간섭기 이래 도망하여 관직을 冒受한 향리를 환본하고자 노력하였고,¹⁰⁸⁾ 향리의 자손으로서 免役 증명 문서가 없는 품관은 토지를 주지 않았다.¹⁰⁹⁾ 태종 14년(1414)에는 고을별로 양반·향리·백성의 世系를 자세히 推考하여 戶籍을 만들고 戶曹와 監營, 해당 고을에 각각 한 건씩 두도록 함으로써,¹¹⁰⁾ 공양왕 2년(1390)에 행하지 못했던 양반 호적 정리를 완수하였다.¹¹¹⁾

103) 『定宗實錄』 卷5, 定宗 2年 7月 2日 乙丑.

104)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11月 23日 己卯.

105) 『世宗實錄』 卷2, 世宗 卽位年 11月 3日 己酉.

106) 『定宗實錄』 卷2, 定宗 元年 8月 19日 丙辰;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2月 21日 丙寅;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5月 28日 丁未.

107) 『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9月 24日 壬寅.

108) 『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12月 16日 壬戌.

109) 『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12月 18日 己丑.

110)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4月 2日 乙巳.

정부는 품관과 향리의 구분을 바탕으로, 양자의 위치를 달리 규정하였다. 품관에게는 이른바 ‘封建’의 원리 속에 왕실 ‘藩屏’의 역할을 요구하였다.¹¹²⁾ ‘번병’의 역할은 공양왕 3년(1391) 제정된 과전법에서부터 천명되었다.¹¹³⁾ 在外 품관에게 本田의 多少에 따라 10결 혹은 5결의 軍田을 분급하는 대신, 부모의 喪葬·疾病 외에 매년 100일을 三軍府에서 宿衛하게 한 것이다.¹¹⁴⁾ 품관이 赴京 侍衛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군전을 거두는 것은 물론¹¹⁵⁾ 직첩을 빼앗고 재산을 籍沒하며 본인을 巡軍獄에 가두는 등 엄벌하였다.¹¹⁶⁾ 일부 고을 품관은 眞殿과 왕실의 胎室을 시위할 의무도 부여받았다.¹¹⁷⁾

정부는 품관이 고을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또한 강화하였다. 각 고을 품관은 수령에게 수취와 답험, 구휼 업무를 위임받은 委官이나¹¹⁸⁾ 그것을 감독하는 監考,¹¹⁹⁾ 陣法의 훈련을 담당하는 訓導官¹²⁰⁾ 등의 직임을 수행하였으며, 수령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수령직을 대신하기도 하였다.¹²¹⁾ 비교적 일찍부터 面里制가 시행된 곳에서는 품관 가운데 有職·有識한 이가 향리 대신 수령의 명령을 전달하는 등 면리 단위 업무를 담당하였다.¹²²⁾ 이처럼 조선초기 품관은 그동안 향리가 수행한 주요 행정 업무를 대신하면서, 지방 통치의 새로운 동반자 내지는 조력자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111) 그러나 이후에도 향리 출신 품관은 상당수 잔존하였다. “諸道損實委官 類皆鄉原無恥之徒及吏典出身者(『世宗實錄』卷9, 世宗 2年 8月 20日 丙辰)”

112) 李景植, 『韓國中世土地制度史 - 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4~25쪽.

113) 『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恭讓王 3年 5月.

114) 『太宗實錄』卷7, 太宗 4年 6月 9日 戊寅.

115) 『太宗實錄』卷8, 太宗 4年 8月 28日 丁酉.

116)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正月 25日 乙丑;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6月 2日 壬午; 『太祖實錄』卷12, 太祖 6年 10月 28日 丙午.

117) 『太宗實錄』卷2, 太宗 元年 10月 8日 癸亥; 『太宗實錄』卷27, 太宗 14年 2月 8日 壬子; 『世宗實錄』卷2, 世宗 卽位年 11月 1日 丁未.

118) 『太祖實錄』卷8, 太祖 4年 7月 30日 辛酉;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6月 1日 癸未; 『世宗實錄』卷1, 世宗 卽位年 8月 17日 甲午; 『世宗實錄』卷9, 世宗 2年 8月 20日 丙辰; 『世宗實錄』卷47, 世宗 12年 3月 5日 乙巳.

119) 『太祖實錄』卷8, 太祖 4年 7月 30日 辛酉.

120)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7月 9日 己巳.

121) 『太祖實錄』卷1, 太祖 元年 8月 2日 辛亥.

122) 『世宗實錄』卷80, 世宗 20年 3月 14日 戊戌; 『世祖實錄』卷2, 世祖 元年 9月 15日 丁亥; 『成宗實錄』卷2, 成宗 元年 正月 20日 己亥.

반면, 향리는 법제상 身役인 鄉役 혹은 吏役 부담자로 위치지어졌다.¹²³⁾ 고려말까지 향리에게 내려주었던 鄉職은 조선초에 이르러 혁파되었고,¹²⁴⁾ 조선초기 향리는 吏職 수행에 따른 5결의 人吏位田만을 분급받고 있었다. 그나마도 세종 말엽부터 “다른 군역으로 고생하는 자들 모두 位田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인리위전을 혁파하자거나,¹²⁵⁾ 군현마다 향리의 頭目을 정하고 인리위전을 분급하여 그 액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¹²⁶⁾ 이처럼 정부가 향리를 여타 일반 군역을 지는 자들과 비교한 사실로부터, 향리가 吏職이 아닌 吏役 부담자로 고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免役 기준 또한 전보다 엄격해졌다. 『經國大典』 吏典 鄉吏條에 따르면, 文·武科, 生員·進士 시험에 합격한 자, 특별히 군공을 세워 賜牌를 받은 자, 三丁一子 중에서 雜科에 합격했거나 書吏로 있다가 去官한 자의 경우에만 그 자손의 역을 면해주었으며, 祖父와 父가 연이어 2대를 立役하였을 경우 자신이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었다고 호소하여도 들어주지 않았다.¹²⁷⁾ 위 규정 외에도 향리가 금·은 산지와 온천 소재처 등을 발견하는 경우,¹²⁸⁾ 義倉에 곡식을 바치는 경우,¹²⁹⁾ 자진해서 양계 지역에 입거하는 경우¹³⁰⁾ 역을 면해주었으나, 규정 외 면역인 까닭에 가벼이 시행되지는 못했다.¹³¹⁾

공을 세운 향리에게 상으로 관직을 제수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하였다. 일반 양민과 향리가 똑같은 공을 세우더라도 양민은 상으로 관직을 주고, 향리는 역을 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드물게 관직을 주는 경우에도 일단 역을 면해준 후 양민이 받는 관직보다 낮은 품계의 관직을 주었다.¹³²⁾

123) 『經國大典』 吏典, 鄉吏條.

124)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6b(262)쪽. “聖朝立國之初 革去鄉職”

125)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0月 10日 乙酉.

126) 『世宗實錄』 卷88, 世宗 22年 3月 23日 乙丑.

127) 『經國大典』 吏典, 鄉吏條.

128)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0月 22日 甲辰;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1月 7日 戊午; 『世宗實錄』 卷81, 世宗 20年 4月 18日 辛未.

129)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1月 11日 乙卯.

130) 『世宗實錄』 卷62, 世宗 15年 11月 19日 戊戌.

131) 『文宗實錄』 卷5, 文宗 元年 正月 3日 癸卯. “鄉吏免鄉之法至重 不可輕議”

132) 『世宗實錄』 卷81, 世宗 20年 4月 18日 辛未.

위의 포상 규정은 일면 향리가 양민보다 지위가 낮았다는 인상을 주지만, 고

이처럼 정부가 법제상 향리를 吏職이 아닌 吏役 부담자로 규정했음에도, 개별 향촌 사회에서는 전통에 따라 향리를 吏職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져, 茶山과 燕巖 역시 향리를 “庶士”, 곧 孟子가 말한 “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庶人而在官者)”¹³³⁾로 칭하였다. 여기서 관직은 물론 품계가 있는 정식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각 고을 향리직이 본래 “조정의 여러 관직을 본받아”¹³⁴⁾ 설치한 직임이며 향리 또한 “官에 종사하는 자”¹³⁵⁾라는 인식은, 향리 집단 자신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일부 儒者들 사이에서도 얼마간은 공유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 호장은 吏房과 함께 한 고을 향리 집단의 최고직자로 정착하여 고을 일을 총괄하고 고을 민을 관리하였다. 조선후기 자료이기는 하지만, “外邑에는 향리와 假吏의 칭호가 있는데 … 要任은 모두 향리가 主掌한다. … 고을에는 호장과 이방의 位가 있는데 이들이 가장 높다”¹³⁶⁾는 표현이나, “[適任者가] 호장이 되고 이방이 되게 한 후, 오랫동안 그 任에 있게 하여 그 아랫사람을 거느리게 하라”¹³⁷⁾는 표현은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호장과 이방은 향리 최고직자로서 흔히 “三班 首吏”¹³⁸⁾ 혹은 “三公兄”¹³⁹⁾이라 불리었으며, 일반 향리보다 훨씬 높은 자질과 책임을 요구 받았다.

정부는 토착 지배층으로서 호장의 특수한 위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호장을 ‘향리’라는 동질적 범주 안에 고착시켜 그 위상을 축소하려 하였다. 정부가 규정한 ‘향리’라는 범주 안에서 호장과 일반 향리—예컨대, 色吏—는 동질적인 吏役 부담자로 규정되어 거의 동일한 법·제도 조항을 적용받았다.

려말 조정에서 향리의 관직 제수가 주요 문제로 대두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향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다.

133) 『與猶堂全書』 3集 卷22, 喪儀節要 卷2 (다산학술문화재단, 『定本 與猶堂全書』 22, 사암, 2013, 172쪽); 『燕巖集』 卷1, 煙湘閣選本, 居昌縣五愼祠記.

134) 『掾曹龜鑑』 卷1, 序, 1a(187)쪽. “州縣胥吏 効法於朝廷列職”

135) 『掾曹龜鑑』 卷1, 跋, 5b(196)쪽. “吏亦仕於官者耳”

136) 『星湖僊說』 卷10, 人事門, 胥徒褒貶.

137) 『孤山遺稿』 卷5 下, 條約, 鄉社堂條約.

138) 李勛相, 앞의 논문, 329~334쪽 참고.

139)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2a(211)쪽.

“又公兄者 韻府註兄爲長 盖謂公所之長也”

호장이 향리 집단 밖에서는 ‘吏役’으로, 향리 집단 안에서는 ‘吏職’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호장의 역을 면해주는 것은 그 직과 별개의 문제였다. 역을 면해주는 것은 곧 양인으로서 직을 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었으므로, 역을 면한 호장이 그대로 호장직을 맡거나, 과거를 통하여 관직을 얻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한가로운 양인’이 되거나, 그것은 양인으로서 자유였다. 다만, 호장층은 고려시기 이래 본관에서 토착 지배층으로 위치하였으므로, 호장이 역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민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며 대개 ‘鄉貢 學生’, 곧 ‘貢生’을 자처하며 과거를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리는 본래도 법적으로 문·무과 및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 건국을 전후하여 향리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불법적 경로가 차단되고 면역과 포상 기준이 강화되는 등 관직 제수의 가능성이 더욱 통제되었으나, 향리의 문·무과 응시 자체를 법적으로 금하거나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¹⁴⁰⁾ “우리 동방의 향리 족속은 무릇 貢擧와 歷試를 사족에 건주어 하였다”¹⁴¹⁾는 표현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향리는 자유롭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吏役을 부담하는 동시에 과거를 준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조선전기 수십 명의 향리가 문·무과에 급제하여 官界로 진출하였다.¹⁴²⁾

본관에서 대대로 호장직을 세습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던 호장층은 여전히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는 향리의 대다수를 구성하였으며, ‘退老한 호장의 班列’이나 공이 있는 호장은 상으로 직첩을 받기도 하였다. 『掾曹龜鑑』에 따르면, 정부는 향직을 혁파하는 대신 退老한 호장의 반열을 初仕郎의 품계로 고쳐 攝戶長부터 通德郎을 내려 5품으로 간주하였다.¹⁴³⁾ 正朝戶長과 안일호장 또한 섭호장과 함께 ‘퇴로한 호장의 반열’에 포함되어 직첩을 받았는데,¹⁴⁴⁾ 직첩을 받은 호장은 스스로 관직을 자처하였다.¹⁴⁵⁾

140) 『光海君日記』 卷148, 光海 12年 正月 2日 辛巳. “鄉吏許科 昭載國典”

141) 『佔畢齋集』, 彝尊錄 上, 先公譜圖 第一. “吾東方鄉吏之族 凡貢擧歷試 視諸士族焉”

142) 韓永愚, 『과거, 출세의 사다리 1 (태조-선조 대)』, 지식산업사, 2013, 45~46쪽 및 615~617쪽 참고. 이 중에는 역을 면한 향리도 있었을 것이다.

143)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6b(262)쪽.

“改戶長退老之班 爲初仕郎品之階 自攝戶長至通德郎 秩視五品”

144) 섭호장은 ‘公事를 攝行하는 호장’으로, 본 고을의 陳省을 고찰하여 帖을 주었

호장층 가운데 일부가 과거와 포상을 통하여 관직을 얻었던 한편으로, 각 고을의 주요 호장 가문이 호장직을 세습하는 경향 또한 계속되었다.¹⁴⁶⁾ 壬辰倭亂 이전까지 각 고을 호장은 거의 모두 해당 고을 토성 출신이었고 현직 호장의 四祖 혹은 三祖가 모두 호장을 역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임란 이후 조선후기까지도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되었다. 호장층은 호장직을 세습함으로써 토착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조 정부가 수령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하고 법적으로 지위를 강화하여 한 고을의 군주(一邑之主)¹⁴⁷⁾로서 고을을 다스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고을 民戶의 長으로서 호장의 전통적 권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세종 7년(1425) 久任法이 시행됨에 따라 수령의 재임 기간이 늘어났지만, 고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단연 해당 고을 호장이었기 때문이다. “향리는 父祖 때부터 대대로 그 직에 임하였으므로 民이 향리를 두려워함이 수령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심하다”¹⁴⁸⁾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호장의 권위는 나말여초 이래 대대로 본관에 토착하면서 이어온 전통에 기초하였다.

조선초기 호장의 전통적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元旦肅拜였다. 매년 정월 초하루, 각 고을 호장이 예물을 갖추어 국왕에게 숙배하는 것은 중국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聖節使와 冬至使의 뜻을 본받은 의례였다.¹⁴⁹⁾ 『掾曹龜鑑』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각 고을 수령이 삼가 호장을 보내서 문안을 대신하게 한다”¹⁵⁰⁾고 했으나, 이는 수령권이 강한 후대의 인식으로, 원단숙배는 고려초 이래 조선후기까지 호장의 고유한 역할이었다.

다(『經國大典』 吏典, 鄉吏條). 이때 帖을 주는 대상에는 섬호장 외에도 正朝戶長과 安逸戶長이 포함되었으므로, 결국 앞서 언급한 ‘퇴로한 호장의 반열’이란 이들 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5)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4a(257)쪽.

“列聖朝 有入侍召對者 自吏曹例加職帖 次等陞階 朝家之恩典 亦至矣 以是爲戶長者 以官職自處”

146) 李樹健, 앞의 논문, 7~16쪽.

147) 『世宗實錄』 권34, 世宗 8年 12月 8日 丁卯.

148) 『世宗實錄』 권20, 世宗 5年 5月 28日 丁未.

149)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4a(257)쪽.

150) 위와 같음. “每歲元朝 各官守令 謹遣戶長替行問安者 如聖節使冬至使之義也”

숙배시에는 “禮物을 갖추어 禮를 행하는 義理(執贄修禮之義)”¹⁵¹⁾에 따라, 正朝戶長이 국왕에게 자기 가문의 世系圖와 함께 종이를 예물로 바쳤고, 국왕은 붉은 홑옷 등 衣帶類와 白米·酒 등 음식을 답례로 내려주었다.¹⁵²⁾ 천자가 제후의 朝貢에 대하여 반드시 回賜의 형식으로 답례를 하였듯이, 국왕 또한 호장의 하례에 대하여 답례를 해주는 것이 의리였기 때문이다. 退老한 호장의 반열이나 공이 있는 호장은 숙배시 직첩을 받기도 하였다. 태조 6년(1397), 경주의 戶長正朝 崔圭가 태조의 眞殿을 모시겠다고 하여 宣務郎 增若道 驛丞에 제수된 것이나,¹⁵³⁾ 19세기 商山 정조호장 李慶蕃이 국왕에게 奏對한 稱賞으로 통덕랑에 제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⁵⁴⁾

정조호장은 매년 정월 초하루 외에 각종 왕실 경조사 때에도 숙배하였다. 『慶州戶長先生案』에 따르면, 국왕의 즉위와 복위, 왕세자비의 책봉과 출산, 太上王·大行大王 승하와卒哭 등의 왕실 경조사 때 호장이 숙배하였다.¹⁵⁵⁾ 세종대에는 疎遠한 御鄉의 호장까지 모두 하례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 하례하는 어향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¹⁵⁶⁾ 이러한 제한 조치는 표면상 “번거로움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향이라는 특별한 鄉(고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해당 고을 호장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151) 『太宗實錄』 卷32, 太宗 16年 7月 12日 辛丑.

152) 공민왕 13년(1364) 주상 복위 때에 숙배한 호장정조 李光茂, 공양왕 2년(1390) 정월 고려 마지막 임금에게 숙배한 호장정조 金乙珍, 태조 원년(1392) 조선왕조에 숙배한 호장정조 李宣은 붉은 홑옷을 하사받았다. 이선은 태조 7년(1398) 세자전 원자 탄생시에도 숙배하여 백미 4섬을 받았다. 태종 원년(1401) 6월 숙배한 호장정조 金恪은 의대를 받았다(『慶州戶長先生案』).

153) 『慶州戶長先生案』, 295쪽.

154) 『掾曹龜鑑』 卷1, 跋, 3b(129)쪽.

“商山李君慶蕃 以正朝戶長 奏對稱賞 旨賜紙筆 書進所懷 特加通德郎階”

155) 태종 3년(1403) 호장정조 鄭胥가 태조왕비 승하 때 숙배, 태종 8년(1408) 6월 호장정조 金敏이 태상왕 승하 때 숙배, 세종 15년(1433) 2월 13일 제2호장이 왕세자비 책봉 때 숙배, 세종 32년(1450) 6월 호장정조 金瑩이 대행대왕 줄곡에 참여하여 숙배, 문종 2년(1452) 5월 안일호장정조 孫達이 대행대왕 문종 승하 및 주상 즉위에 참여하여 숙배, 단종 3년(1455) 윤6월 11일에 호장정조 李伊가 주상 즉위에 참여하여 숙배하였다(『慶州戶長先生案』).

156) 『世宗實錄』 卷59, 世宗 15年 3月 20日 癸酉.

정조호장의 숙배는 평소 수령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하고 있던 국왕이 토착 지배층에게 고을 내부 사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위에서 언급된 절차상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다. 英祖 때는 臺臣이 호장의 숙배가 文具에 불과하다며 혁파할 것을 청했으나 국왕이 “禮를 사랑하고 舊禮를 보존하는(愛禮存羊)” 뜻으로 불허하였고,¹⁵⁷⁾ 정조의 『日省錄』에도 매년 정월 초하루에 輦을 타고 敦化門 밖으로 나가서 각 고을 호장에게 고을 사정을 물었다는 기사가 어김없이 등장한다.¹⁵⁸⁾

호장은 전통적 권위를 바탕으로 고을 내의 각종 제사 또한 주관하였다. 태조는 穆祖의 國舅인 李肅과 부인 鄭氏의 묘가 위치한 平昌郡의 호장에게 토지와 함께 幟頭·黑團領·玉圈子·犀角帶를 내려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兵亂을 거치면서 묘의 標識가 사라져, 약 400년이 지난 正祖 때에 이르면 郡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¹⁵⁹⁾ 이에 정조는 郡司 옆에 祠宇를 세우고, 그동안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단령·옥권자·서각대를 다시 하사하였다.¹⁶⁰⁾ 寧越郡에서는 호장 嚴興道가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장사지낸 이래, 조선후기까지도 매년 仲夏마다 호장이 단종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¹⁶¹⁾

그러나 각 고을 토성 사족 출신 외관이나 품관은,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호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분수에 넘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安東에서는 조선 明宗 때에 安東權氏 출신 외관들이 본래 호장이 관장하던 太師廟의 제사를 ‘鄉에 거주하는 자손으로서 사족인 자’에게 넘겨주었고,¹⁶²⁾ 『林下筆記』의 저자 李裕元도 영월 호장이 단종의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400년 간 분수 넘치는 일을 자행하여 … 事體가 未安하다”¹⁶³⁾고 하였다. 이처럼 사족들이 호장 대신 고을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노력한 까닭은, 제사 주관이 토착 지배층으로서 권위와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157) 『林下筆記』 卷18, 文獻指掌編, 戶長の 肅拜.

158) 『日省錄』 正祖 11年; 正祖 16年; 正祖 17年; 正祖 24年 正月 1日.

159) 『日省錄』 正祖 12年 8月 16日.

160) 『日省錄』 正祖 12年 8月 23日.

161) 『林下筆記』 卷28, 春明逸史, 寧越의 神堂.

162) 『承政院日記』 卷33, 英祖 2年 5月 11日 壬寅.

163) 『林下筆記』 卷28, 春明逸史, 寧越의 神堂.

대토지 소유는 호장의 권위가 실제 지배로 발현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에 ‘전장을 넓게 둔 향리’가 있는 것에서¹⁶⁴⁾ 미루어 알 수 있듯, 호장 중에는 고을 내에 대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많았다. 앞서 보았듯이 태종 때 이미 향리의 대토지 소유 문제가 지적되었으며,¹⁶⁵⁾ 세종 때에도 다음과 같이 호장이 農莊을 두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刑曹에서 아뢰기를, “牙山戶長 全謹은 田地를 널리 점하고 農場을 많이 두어 양민을 몰래 숨기고 奴婢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瑞山戶長 柳訥 또한 모두 세 명의 첩을 두고, 누락된 田地와 民戶를 많이 점하여 민간에 폐를 끼칩니다. 청컨대 『六典』에 의거하여 典刑대로 回示하소서.”¹⁶⁶⁾

위에서 형조는 호장이 일으킨 폐단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호장이 田民을 몰래 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첩을 두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였다.

특히, 田民 影占은 公田과 公民을 私田과 私民으로 만드는 행위였으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부세를 징수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향리는 吏役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토지가 많아도 賦役을 바치지 않았기에 때로는 토지가 많은 富民이 스스로 자신의 토지를 향리의 名籍에 合錄하여 각종 부역을 면하고는 그 보답으로 향리에게 酒食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⁶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호장층의 대토지 소유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것이 田民을 私的으로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기에 문제시된 것이었다.

164)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

“수령을 조롱하고 專權하여 작폐하는 자, 몰래 뇌물을 받고 差役을 不均하게 하는 자, 稅를 거둘 때에 橫斂 濫用하는 자, 良民을 함부로 占하여 은폐한 후에 부려먹는 자, 田莊을 넓게 두고 민들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는 자, 마을을 함부로 다니면서 侵漁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자, 권세가에게 붙어 本役을 피하고자 하는 자, 역을 피하고자 도망하여 촌락에 숨어있는 자, 官의 위엄을 가장하여 민을 侵虐하는 자, 良家의 딸이나 관비를 첩으로 삼는 자”

165)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11月 23日 己卯.

166) 『世宗實錄』 卷23, 世宗 6年 3月 11日 丁亥.

167)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5月 28日 丁未.

대토지 소유를 수단으로 하는 지배가 불법적인 ‘私’의 영역에 있었다면, ‘掌印行公’에 의한 호장의 지배는 아직까지 합법적인 ‘公’의 영역에 있었다. ‘장인행공’이란 수호장이 ‘읍사’의 인신을 가지고 공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초 이래 각 고을에는 외관의 인신과 구분되는 읍사의 인신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호장 중에서도 읍사 인신을 주관하는 호장을 수호장이라 불렀다. 『慶州戶長先生案』의 초기 기록에서, 일반 호장이 수호장으로 差任된 사실을 ‘장인행공’ 혹은 ‘開印行公’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인신은 수호장의 전통적 권위와 현재 권한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이었기에 호장이 賤妾을 가까이 하는 등 죄를 지으면 인신을 맞지 못했다.¹⁶⁸⁾

조선 정부는 前朝와 마찬가지로¹⁶⁹⁾ 호장에게 읍사의 인신을 鑄造해주고 官司 有故時 호장이 읍사 인신을 가지고 공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도,¹⁷⁰⁾ 인신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다. 태종 6년(1406) 大司憲 許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읍사 인신을 모두 거둘 것을 건의하였다.

“각 도의 大小 각 官에는 모두 州司의 인신이 있어서 호장이 주관하는데, 춘락에 移文하여 폐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戶口를 傳準하는 문권이나 노비 문권에 인신을 찍어주기를 是非를 묻지 않고 私情에 따라 함부로 하니, 京外 官司에서 決訟할 때를 맞아 良賤이 뒤섞여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주사의 인신을 모두 거두소서.” …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의정부에서 議得하기를, … “州司 인신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官 수령에게 보고하는 문서에만 인신을 쓰도록 하고, 그밖에 行使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금하소서.”¹⁷¹⁾

168) 『慶州戶長先生案』, 305쪽.

“戶長正朝 李秀民 세조 6년(1460) 2월 6일에 差任하고 12일에 인신을 열고 공무를 행하다. 친척을 가까이 했으므로 맡아들 記官 希元이 문에서 인신을 맞다.”

169)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4b(216)쪽.

“麗太祖并吞三韓之後 … 設鄉職 封戶長 鑄給印信 雖貶而以示不忍永絕之意”

170)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3b(256)~24a(257)쪽.

“故自朝家 鑄給印信 官司有故 則使用其印 代行公事”

171)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6月 9日 丁卯.

위의 자료는 수령이 파견된 고을에서 호장이 수행했던 공무를 보여준다. 우선 호장은 고을의 호구를 파악한 후 그 내용을 문권으로 확인해주었다. 앞서 언급했듯, 호장은 읍사의 수장이면서 ‘戶’ 계열 향리의 수장이었기에 호구 파악과 그것에 기초한 부세 징수는 호장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었다. 고려중기 이후 지방 행정에서 외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읍사 소속 ‘正’ 대부분이 관아로 移屬되었음에도, 호장과 호정·부호정 등 ‘戶’ 계열만큼은 읍사에 남아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¹⁷²⁾ 고을 호구를 파악할 때는 良賤의 판별이 동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私情이 작용할 수 있었다.

고을 호구를 파악하는 일은 부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으므로, 호구 파악을 전담한 호장은 부세 징수에서도 私的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다.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에서 “稅를 거둘 때에 橫斂 濫用하는 자”와 함께 “양민을 冒占하여 은폐한 후 부려먹는 자”를 명시한 것에서¹⁷³⁾ 알 수 있듯, 호장은 호적에서 民戶를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민호를 影占하기도 하였다. 세종 때 戶籍制를 정비한 것에는¹⁷⁴⁾ 수령이 고을 호구를 파악함에 있어서 호장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호구 누락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세를 정확히 징수하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호장은 호적 및 軍籍 작성을 토대로 徭役과 軍役의 동원도 전담하였다. 요역은 주로 현물 부세를 수송할 때나 토목 공사가 있을 때에 부과했는데, 다음 자료에서 호장이 고을 민을 동원하여 공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府人으로서 役을 감독한 자는 前 承奉郎 宋元庇, 郎將 高迪, 散員 申得貴 · 金乙寶 · 邢方彦, 檢護軍 高天景 · 曹漢貴 · 高仲鶴, 令同正 任寶 · 魏彦 · 吳甫萬 · 曹生哲 · 張龍世 · 金成奇 · 魏宜 · 姜仁德이다. 호장 申奉間은 供給을 도맡았고, 호장 吳因教와 〔詔〕文記官 曹修가 공사를 총괄하였다.¹⁷⁵⁾

172) 공민왕 10년(1361)에 작성된 『慶州戶長先生案』의 서문에는, 慶州 府司의 구 성원으로서 호장정조, 섭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詔文州史만이 나타난다.

173)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

174)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5月 2日 癸丑.

175) 『東文選』 卷76, 記, 中寧山皇甫城記.

위의 자료는 태조 원년(1392), 全羅道 長興府 中寧山에 성을 쌓을 때에 공사에 참여한 토착 지배층의 성명을 기록한 中寧山皇甫城記의 명단이다. 위의 명단에서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다는 품관의 성명도 다수 확인되지만, 무엇보다 공사를 총괄하고 供給을 도맡았다는 두 호장의 존재가 주목된다. 여기서 공급은 공사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공급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은 기록에 쌀 20석을 義財로 내어 吏로 하여금 번갈아 주관하게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호장이 공급한 것은 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역 동원은 그 특성상 요역 동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었고, 군역 동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호장이 엄벌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태조 4년(1395), 廣州戶長 李勤이 軍期, 곧 군사 동원 기일을 맞추지 못해 廣州道 兵馬使 趙希古가 勤을 극형에 처하려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¹⁷⁶⁾ 이밖에 군적을 작성하면서 일부러 군사를 누락시키거나 이름을 바꾸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옮겨 江原道 殘驛吏로 속하게 했으며,¹⁷⁷⁾ 실수로 군적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全家를 양계로 옮기도록 하였다.¹⁷⁸⁾

고을마다 호장이 요역과 군역의 동원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호장이 “물래 뇌물을 받고 差役을 不均”¹⁷⁹⁾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보다 경계한 것은 호장이 요역이나 군역 동원을 구실로 양민을 사적으로 使役하는 것이었다.¹⁸⁰⁾ 이 또한 일종의 양민 影占이었다. ‘租庸調’ 중 租와 調(貢物)의 징수가 민의 생산물을 징수하는 것이었다면, 庸에 해당하는 각종 役의 동원은 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것이었기에 부세 징수에 비해 인신 지배의 가능성이 컸다. 특히, 군역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 고을 호장이 叛軍에 붙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¹⁸¹⁾

176) 『太祖實錄』 卷8, 太祖 4年 9月 16日 丁未.

177) 『世祖實錄』 卷28, 世祖 8年 5月 9日 癸卯.

178) 『成宗實錄』 卷216, 成宗 19年 5月 29日 壬辰.

179)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

180) 호장이 閑丁을 강제로 立役시켜서 官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普旆瓮匠 率閑丁名實伊來置曰 八莒戶長侵捉立役云 欲免官屬云云(『默齋日記』 明宗 13年 9月 26日)” 특히, 官奴婢는 호장의 직접적인 使役 대상이었다.

181) 영조는 동왕 4년(1728) 李麟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여러 고을 향리들이 적에게 붙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듬해 봄부터 향리에게 復戶를 지급하기 시작하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임내에서는 호장의 직접 지배가 절대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태종 6년(1406) 읍사 인신의 혁파에 관한 기사에서¹⁸²⁾ 호장이 州司 인신을 찍어 村落에 移文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읍의 개입은 지방 행정 체계에 따라 公文을 移文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태종 14년(1414) 大司憲 柳觀 등은 “前朝에서는 … 호장 한두 명이 임내를 주관하면서 民을 어지럽게 하고 폐단을 일으켰다”¹⁸³⁾고 지적하면서, 호장의 임내 직접 지배에서 발생할 갖가지 폐단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임내에서는 부세 징수 업무가 호장 한두 명에게 일임되었으므로 호장이 부세 징수에서 사적 권한을 발휘할 가능성이 주읍보다 훨씬 높았다. 임내 호장이 ‘권세 있는 재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사익을 채운다거나¹⁸⁴⁾ “公을 여위게 하고 私를 살찌게 한다”¹⁸⁵⁾는 표현은 그러한 우려를 나타낸다. 임내의 호장은 자신이 정한 稅目에 따라 收稅한 후, 일부는 주읍에 바치고 나머지 일부를 취하여 해당 고을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일부 주읍 수령은 자신이 직접 임내를 다스려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적당한 액수의 세금까지 바치는 호장을 ‘能吏’로 여겨 총애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령이 파견되지 않아 호장이 직접 田民을 지배한 임내의 경우, 호장이 부세 징수나 역 동원을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호장의 직접 지배 영역인 임내를 축소시켜야만 했다. 호장의 지배 영역이 축소될수록, 국가의 지배 영역은 확대되기 마련이었다. 호장이 지배하는 임내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수령의 지배하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임내를 혁파하여 주읍 直村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으로, 임내의 호장을 주읍 관아로 편입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임내 공수전의 혁파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시행된 정책이었다.

였다(『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7b(222)쪽). 居昌縣에서는 신씨 성을 가진 향리 다섯 명이 이인좌의 무리를 막았기에, 이후 다섯 명에게 佐郎을 追贈하고 五愼祠를 세워 제사 지냈다(『燕巖集』 卷1, 煙湘閣選本, 居昌縣五愼祠記).

182)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6月 9日 丁卯.

183)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7月 4日 乙亥.

184) 『世宗實錄』 卷100, 世宗 25年 5月 16日 庚午.

185) 『世祖實錄』 卷46, 世祖 14年 6月 20日 戊申.

4. 世宗朝의 田制 改編과 戶長의 ‘衙前’化

과전법상에서 지방 관아는 중앙 각사와 마찬가지로 公廩田을 절급받았다. 조선초기 지방 관아의 공해전은, 관아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公須田과 외관의 俸祿 및 활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衙祿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⁸⁶⁾ 공수전은 고려 성종 2년(983)부터 고을 丁數에 따라 절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액수는 지방 관아에 절급된 공해전 액수 전체의 8~9할을 차지했다.¹⁸⁷⁾ 고려 현종·문종 때 기사에 읍사 구성원으로서 ‘公須’史·‘公須’正의 존재가 각각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¹⁸⁸⁾ 공수전은 기본적으로 읍사에서 운영하였으며 외관의 邑祿 또한 읍사 공수전의 田租에서 지출하였다.¹⁸⁹⁾

조선 건국세력은 고려말 이래 외관의 품질과 자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관을 중심으로 지방 관아의 공해전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우왕 14년(1388) 7월, 조준 등은 전제개혁에 관한 글을 올려 “외록전은 留守·牧·都護에서부터 知官·監務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정하도록”¹⁹⁰⁾ 건의함으로써, 外祿田을 공수전에서 분리된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외관의 품계에 따라 외록전의 액수를 정하여 절급하도록 한 上記 규정은, 조선 최초의 公的 法典인 『經濟六典』에 실려 아록전 규정의 기초가 되었다. 아록전의 성립은 외관의 財政權이 읍사로부터 독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186) 朝鮮初期의 衙祿田과 公須田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安秉佑, 「高麗末·朝鮮初의 公廩田 - 財政의 構造·運營과 관련하여 -」, 『國史館論叢』 5, 1989.

李章雨, 「朝鮮初期의 衙祿田과 公須田」, 『李基白先生 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일조각, 1994.

李景植, 『(증보판) 韓國中世土地制度史 - 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85~89쪽.

187) 고려에서 지방 관청의 공해전은, 공수전과 紙田·長田으로 구성되었다.

“成宗二年六月 定州·府·郡·縣·館·驛田 千丁以上州縣 公須田三百結 五百丁以上 公須田一百五十結 紙田十五結 長田五結 二百丁以上 缺 一百丁以上 公須田七十結 紙田十結 一百丁以下 公須田六十結 長田四結 六十丁以上 公須田四十結 三十丁以上 公須田二十結 二十丁以下 公須田十結 紙田七結 長田三結(『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公廩田柴, 成宗 2年 6月)”

188)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鄉職.

189) 『高麗史』 卷82, 志34, 食貨3, 祿俸, 肅宗 6年 2月.

190)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辛禡 14年 7月.

외관제와 군현제 정비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고 있었던 태종 3년(1403), 司諫院에서는 전국의 고을을 5등급 — 1등급은 3留守府, 2등급은 5大都護府와 10州牧, 3등급은 20州官, 4등급은 郡, 5등급은 縣 — 으로 구분하고, 『經濟六典』의 예에 따라 아록전과 공수전을 절급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⁹¹⁾ 각 고을에 파견된 외관의 품계를 기준으로 전국 고을의 등급을 체계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各官의 아록전은 물론 공수전까지 절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아록전과 공수전의 정리 작업은 이로부터 10년 후인 동왕 13년(1413), 전국 고을의 등급 개정이 완료되고 나서야¹⁹²⁾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한편, 공수전의 절급 기준이 고을에 파견된 외관의 품계로 바뀔에 따라, 공수전의 운영 주체도 ‘읍사’에서 외관의 ‘관아’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다. 태종 10년(1410) 기사에서 확인되는, 梁州의 公須戶長 鄭春의 사례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以衷은 甲申年(태종 4년, 1404) 10월 12일에 양주의 공수호장 정춘이 使客의 支應을 더디게 한 것에 노하여 그를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정춘이] 그 달 20일에 이르러 죽었으니, 죽음이 辜限 내에 있습니다.¹⁹³⁾

공수전의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읍사의 ‘史’와 ‘正’이 담당했던 公須 업무를 호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호장이라는 직위 앞에 ‘공수’라는 업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여기에서는 호장을 읍사의 ‘長’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업무를 分掌하는 존재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知梁州事였던 愼以衷이 공수호장에게 직접 벌을 내린 것을 볼 때,¹⁹⁴⁾ 공수호장의 소속 조직은 관아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읍사에서 운영하던 공수전을 관아로 옮기고 당분간 그 관리를 공수호장에게 맡긴 것이다.

191) 『太宗實錄』 卷6, 太宗 3年 閏11月 19日 壬戌.

192)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0月 15日 辛酉.

193)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4月 21日 丁巳.

194) 위와 같음. “又嘗任梁州 以使客支應有關 杖殺戶長鄭春”

외관이 파견된 고을에서 공수전의 운영 주체가 관아로 바뀐 것과 달리, 아직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各官 임내에서는 호장이 주재하는 읍사가 고을의 관사로서 각종 공무를 처리하면서 전과 같이 공수전을 운영하였다. 임내 공수전의 절급 기준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국초부터 『經濟六典』에 ‘임내를 혁파하는 법’을 수록하는 등¹⁹⁵⁾ 임내의 전면적 혁파를 계획하였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내 공수전의 절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임내 공수전은 당분간 기존에 절급받은 액수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것이나, 당시 군현제 정비 작업과 맞물려 중국에는 혁파될 것임이 분명하였다.

임내 공수전은 세종 27년(1445)의 田制 개편에서 모두 혁파되었다.¹⁹⁶⁾ 고려 성종초 이래 존속해온 임내 공수전을 이때에 이르러 혁파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외관이 파견되지 않아 공수전의 절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관이 없는 임내에 국왕의 政令을 전달하는 使客이 왕래할 리도 없었다. 고려말 이래 외관을 증파하여 속현을 비롯한 임내의 수를 줄여갔던 정부는 그동안 공수전 절급 근거와 상관없이 존속해온 임내 공수전을 혁파함으로써, 외관의 품계 및 사객 왕래의 빈도에 따른 절급이라는 원칙을 지키고,¹⁹⁷⁾ 각급 관료나 기관에 절급할 수조지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임내의 관사이자 공수전의 운영 주체였던 임내 읍사의 입장에서, 임내 공수전의 혁파는 읍사가 점유해온 유일한 수조지의 박탈을 의미하였다. 이제 읍사는 고려초 이래 유지해온 관사의 지위를 부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조권 행사를 통한 田民 지배의 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것이다. 임내 공수전은 대개 10~20결의 적은 액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¹⁹⁸⁾ 읍사의 수장인 호장 한두 명이 감시를 피해 공수전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심지어 소유하다시피 한다면, 호장이 민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를 행사하여 부세 징수 등에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 또한 다분하였기 때문이다.¹⁹⁹⁾

195) 『世宗實錄』 卷100, 世宗 25年 5月 16日 庚午. “各官任內革去之法 載在六典”

196)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7月 13日 乙酉. “各官任內公須位田 竝皆革除”

197) 공수전의 전조는 주로 해당 고을에 왕래하는 使客을 支應하는 데 쓰였기에, 공수전은 외관의 품계와 함께 사객 왕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절급하였다.

198) 고려시기 향·부곡이 10~20결의 공수전을 절급받은 것으로 보아(『高麗史』 卷78, 志 32, 食貨1, 田制, 公廩田柴), 조선초기 임내 공수전의 액수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임내 공수전이 혁파된 이후 임내가 주읍에 합쳐져 주읍 수령이 직접 통치하는 直村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다.²⁰⁰⁾ 임내가 주읍의 직촌이 되어 임내에 있었던 읍사와 창고가 철거될 경우,²⁰¹⁾ 임내 읍사의 수장이었던 호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읍사의 철거와 상관없이 본관인 옛 임내에 남는 것이었다. 때로는 “임내 군현의 옛 명호가 이미 혁파되었는데도 향리는 오히려 있어서 ‘縣司’라고 칭하며 인신을 차고 명령을 내리는”²⁰²⁾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내의 호장이 자의적으로 읍사를 칭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호장이 주읍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매일 주읍을 출입하며 주읍 수령이 주재하는 고을 관아에서 身役으로 吏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반드시 주읍-임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고을이 타 고을에 병합될 경우, 병합당한 고을에 도착하였던 인리와 관노비 등이 “墳墓와 田宅을 버리고” 주읍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²⁰³⁾ 양식을 짊어지고 주읍을 출입하였다.²⁰⁴⁾ 당시의 기록에서 “양식을 짊어지고 출입한다” 혹은 “왕래한다”는 말이²⁰⁵⁾ 주로 군역을 비롯한 각종 신역의 수행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을 고려하면, 인리 또한 신역인 吏役을 수행하기 위해 주읍을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199) 조선초기 수령조차 官屯田을 경영하여 사익을 추구하던 상황에서(『太宗實錄』 卷10, 文宗 元年 10月 25日 庚寅; 『端宗實錄』 卷9, 端宗 元年 11月 4日 丙辰),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임내의 호장이 공수전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00) 『世宗實錄』 卷100, 世宗 25年 5月 16日 庚午.

201) 세종 17년(1435), 고을 병합에 관한 논의에서, 충청도 감사 南智는 “토지가 넓지 않고 사방 이웃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고을을 강제로 병합한다면 ... 민들을 수고시켜 창고와 관사를 철거해 옮기는 폐가 막중하다”고 아뢰었다(『世宗實錄』 권69, 世宗 17年 7月 22日 辛卯). 위의 논의에서는 읍격이 같은 고을 간의 병합을 주로 다루었지만, 임내를 주읍에 합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이다.

202) 『世祖實錄』 卷46, 世祖 14年 6月 20日 戊申.

203) 『世宗實錄』 卷69, 世宗 17年 7月 22日 辛卯.

204) 『世宗實錄』 卷69, 世宗 17年 9月 3日 辛未.

205) 세종 21년(1439) 사간원에서 인리위전 혁파를 주장할 때에도, 다른 군역을 지는 자들은 양식을 짊어지고 멀리 가야하는 고통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我國裹糧立軍之苦者 皆未有分田 各官鄉吏 世爲鄉業 挾威弄權 廣植田園 無囊橐行遠之役 有殖貨謀生之利 雖無分田 亦能足食 獨於此輩而給位田 無邑無之 厥數猥多 乞革此田以補義倉(『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0月 10日 乙酉)”

임내의 호장에게, 주읍 수령의 관아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스스로 국가의 役 체계 내로 편입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였다. 정부 또한 세종 27년(1445)의 田制 개편에서, 그동안 인리 1인당 5결씩 분급하였던 인리위전을 혁파함으로써, ‘신역으로 吏役을 부담하는 자’라는 향리의 법제상 위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었다.

京畿 各관 인리위전은 매 1결에 대하여 稅 2斗를 廣興倉에 납부하고,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 各관 인리위전은 매 5결 내에서 2결은 광흥창에 속하게 하고, 3결은 口分田으로 삼는다.

그러나 광흥창에 납부하는 2결의 稅 60斗가 매년 부족하여 구분전으로 그것을 채우니, 位田이 有名無實하다. 하물며 다른 군역으로 고생하는 자들 역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과 紙匠의 位田 역시 아울러 혁파한다.²⁰⁶⁾

공양왕 3년(1391) 과전법 제정 당시 ‘鄉吏田’으로 표현된²⁰⁷⁾ 인리위전은 향리가 吏役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급한 구분전이였다.²⁰⁸⁾ 5결 중 2결은 稅位 명목의 水田이었고, 3결은 구분전 명목의 旱田이었는데, 陳損으로 인해 稅額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전의 소출로써 충당하였다.²⁰⁹⁾ 위의 자료에서 위전이 유명무실하다고 함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구분전과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향리는 대대로 鄉業에 종사하며 … 널리 田園을 두고 있으니 … 分田이 없더라도 족히 먹고살 수 있다”고 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²¹⁰⁾

206)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7月 13日 乙酉.

207)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恭讓王 3年 5月.

고을별 향리전의 액수는 자료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옛 果州의 아록전과 인리전 135결을 有備庫에 속하게 하였다(『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閏5月 19日 甲午)”는 기사에서, 아록전의 액수를 세종 27년(1445)의 규정에 따라 40결로 계산하면, 인리전은 모두 합해서 95결이었던 것이 된다.

208) 禍王 14년(1388) 7월, 大司憲 趙浚은 ‘外役田’이라는 명목 하에 留守·州·府·郡·縣吏, 津·鄉·所·部曲·莊·處吏, 院·館直에게 ‘口分田’을 지급하자고 건의하였다(『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辛禍 14年 7月).

209)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9月 10日 乙卯.

그러나 인리위전의 효과를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목적은, 여타 군역 부담자도 모두 위전이 없다고 한 점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향리를 여타 군역 부담자와 비교한 것은 정부가 향리의 업무를 吏職이 아닌 吏役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인리위전의 효과는 吏役 부담자로서 향리의 위치가 공식화됨을 의미하였다. 호장 역시 향리인 이상, 고을 관아에서 吏役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임내 호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읍 편입을 결정했으나²¹⁰⁾ 조선초기 임내의 상황과 조건은 그러한 선택의 向方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교적 일찍 직촌이 된 임내는 대개 田民이 적은 殘邑, 곧 쇠잔한 고을이라 고을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세 징수조차 곤란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이 직접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읍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²¹²⁾ 주읍과 가까운 기존의 직촌부터 점차 面里로 편성되어 가는 상황에서,²¹³⁾ 임내 호장이 옛 임내에 남기는 어려웠고 남아야 할 이유도 많지 않았다. 잔읍의 경우, 호장의 부세 징수 업무는 권한보다 책임에 가까운 것이었다.

임내 호장이 주읍 관아로 들어가는 이상, 지위의 하락은 불가피하였다. 본관이었던 임내의 읍사가 혁파됨에 따라 임내 읍사의 수장이었던 호장은 호장이라는 ‘職’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남은 것은 吏라는 ‘役’에 불과하였다. 吏이면서도 본관을 떠나왔기에 주읍 안에서는 ‘향리’가 아닌 ‘假吏’로 불렸다. 향리들은 대개 ‘壇案’이라 하여 해당 고을 향리의 명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公兄의 직임은 반드시 案에 실린 사람을 擬差하고, 만약 案에 실린 사람이 假吏나 庶流와 통혼한다면 案에서 내쫓는다”²¹⁴⁾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단안에 실린 향리끼리만 통혼하고 ‘공형’ 등 관아의 요직을 독점하였다.²¹⁵⁾

210)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0月 10日 乙酉.

211) 드물게 임내의 인리가 주읍보다 많은 경우, 강제로 이속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7月 4日 乙亥).

212) 李樹健, 앞의 책, 400쪽.

213) 임내 혁파와 동시에 면리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代置할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경우에 따라 종래 임내와 주읍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행정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서서히 면리제로 대체해 갔다(李樹健, 위의 책, 401쪽).

214) 『掾曹龜鑑』 卷2, 附錄, 永嘉誌, 5b(349)쪽.

215) 『星湖僊說』 卷10, 人事門, 胥徒褒貶.

읍사의 호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일찍부터 고을 관아의 요직을 담당했던 주읍 호장은 임내 호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호장은 부세 輸納이나 刑獄 같은 관아의 주요 업무에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잠시 담당자가 되기도 했지만,²¹⁶⁾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호장에게 관아 업무를 맡긴 것은 호장의 자질과 경험을 신뢰했기에²¹⁷⁾ 가능한 것이었겠으나, 향리 가운데 비교적 부유한 호장을 담당자로 삼아 중간 수탈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더 분명하였다.

이처럼 조선초기에 이르러, 각 고을의 호장은 수령이 주재하는 관아에서 고정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吏役을 수행하는 ‘記官’으로 차출되고 있었다. 호장이 읍사의 수장인 것과 별개로 記官은 수령에게 직속된 吏屬이었으므로, 記官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수령이 직접 그 죄를 다스리고 벌을 주었다. 위에서 사례로 살펴본, 양주의 공수호장 정춘 또한 고을 관아의 記官으로서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대에는 “[吏는] 젖은 땀나무를 묶듯이 단속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記官에 대한 단속이 강조되어, 그러지 못한 수령이 쫓겨나기도 했다.²¹⁸⁾

호장의 記官 차출은 향리로서 吏役을 수행해야 할 當番이 되었을 때²¹⁹⁾ 고을 관아에 들어가 일정 기간 동안 立役하고 나오는 ‘入番’의 행위였다. 記官의 임기는 천차만별이었으나, 대개 한 번 입번할 때에 1년 남짓이었다. 향리는 1년 남짓한 입번 생활을 반복하면서 거의 평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다만, 본래 향리가 없어서 한량에 吏役을 정했던 함길도와 평안도의 경우, 記官이 입역한 지 14·15년이 되면 6·7품으로 去官시키도록 하였다.²²⁰⁾

“今外邑 有鄉吏假吏之號 假吏不敢與鄉吏等 其要任者 皆鄉吏主之”

216)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0月 12日 丁丑: 『世宗實錄』 卷83, 世宗 20年 12月 18日 丁亥.

217) 『掾曹龜鑑』 卷1, 戶長疎, 23b(256)쪽.

“戶長者 擇於諸吏中可者 必看履歷人器 所謂戶長者 長於民戶 爲一鄉之標準”

218) 『燕巖集』 卷1, 煙湘閣選本, 居昌縣五愼祠記.

219) 세조 2년(1456) 경주의 수호장이 된 호장 金精은 수호장이 된 지 며칠 만에 營吏 當番이 되어 수호장직을 사임하였다(『慶州戶長先生案』, 304쪽).

220)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4月 1日 庚子: 『世祖實錄』 卷33, 世祖 10年 4月 28日 庚戌.

記官은 본래 중앙各司와 지방 관아의 기록 담당 관원을 가리켰으나,²²¹⁾ 지방 관아에 소속된 記官의 경우에는 중앙 각사에 소속된 記官들과 달리, 본 업무인 기록 업무 외에 관아 운영에 필요한 갖가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음 『世宗實錄』 기사에서 지방 관아 記官의 업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高麗 舊制에 외방 향리도 朝官 文武班을 본떠, 호장에는 大相·中尹·左尹이라는 칭호가 있었고, 記官에는 兵正·獄正이라는 칭호가 있었다.²²²⁾

위의 기사에서는 “고려 舊制에 … 記官에는 兵正·獄正이 있었다”고 하여 이른바 ‘正’을 記官으로 표현하고 있다. 『高麗史』選舉志 鄉職條에 따르면, ‘正’에는 이밖에도 公須正·食祿正·客舍正·藥店正·司獄正 등이 있었다.²²³⁾ 이러한 ‘正’들은 읍사에서 각자의 명칭에 명시된 세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를테면, 위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兵正은 ‘兵’에 해당하는 군사 업무를 맡고 獄正은 ‘獄’에 해당하는 형옥 업무를 맡는 식이었다.²²⁴⁾ 실제로 태종 17년(1417)에도 부세 輸納을 담당한 ‘倉正’의 사례가 확인된다.²²⁵⁾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正’을 지방 관아의 記官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조선초기의 호장이 ‘正’으로 차출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語弊가 있다. 고려의 ‘正’은 본래 호장이 수장으로 있는 읍사에 소속된 향리였기 때문이다. 고려시기에 호장직을 독점 세습하였던 호장층이 그간 家風의 쇠퇴로 인하여 조선초기 ‘正’이 될 수는 있어도, 현직 호장이 동시에 ‘正’이 될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고려후기 고을 관아에서 담당하는 행정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읍사의 ‘正’을 고을 관아로 移屬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다. 공민왕 10년(1361)에 작성된 『慶州戶長先生案』의 序文에서 兵正과 倉正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양자가 고을 관아로 이속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²²⁶⁾

221) “稱記官者 謂記書之官也(『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1a(209)쪽)”, “各司例多置 主事書史令史書令史記官等任(『東史綱目』 下, 官職沿革圖, 諸司沿革, 吏屬)”

222) 『世宗實錄』 卷81, 世宗 20年 4月 1日 甲寅.

223)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鄉職.

224) 고려시기 ‘正’의 업무에 관해서는, 李惠玉, 앞의 논문, 299~304쪽 참고.

225)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閏5月 28日 癸未.

지방 관아의 記官으로 차출된 호장은 ‘(六)房’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육방은 承政院에서 『周禮』의 六典體制에 따라 여섯 명의 承旨를 각각 吏房承旨·戶房承旨·禮房承旨·兵房承旨·刑房承旨·工房承旨로 구성된 체제인데, 이를 지방 관아의 조직에 적용함에 따라 ‘六房 記官’ 체제가 성립하였다.²²⁷⁾ 육방 記官은 지방 관아에서 각각 중앙의 六曹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戶房 記官은 斗斛 관리,²²⁸⁾ 兵房 記官은 兵符와 船軍 관리, 外敵 방어,²²⁹⁾ 刑房 記官은 범인의 推問과 송환²³⁰⁾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식이었다.

임란 이후 正을 房과 色으로 고쳤다는 『掾曹龜鑑』의 기록과 달리,²³¹⁾ 실제로는 조선초기부터 正이 점차 房으로 代置되면서 양자가 공존하였다. 實錄에서는 태종 때부터 房이 언급되고 있으며,²³²⁾ 中宗 30년(1535)부터 명종 22년(1567) 사이 작성된 『默齋日記』에서는 六房이 모두 확인된다.²³³⁾ 正의 경우, 세종 27년(1445) 인리위전 혁파 당시 兵正·倉正·獄正·客舍正의 위전을 혁파하도록 한 것에서²³⁴⁾ 적어도 그때까지는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육방 記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正은 완전히 폐지되었을 것이나, 正 혹은 房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직임은 고을 관아의 요직이었으므로 해당 고을의 향리, 특히 ‘閭閻’²³⁵⁾이 있는 호장층이 독점했음이 틀림없다. 『慶州戶長先生案』에서 戶長正朝 李秀民의 長子가 記官 希元이라 나타나듯, 같은 시기 한 가문 내에서 父가 호장, 子가 기관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²³⁶⁾

226) 尹京鎭, 앞의 논문, 2001, 11쪽.

227)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2a(211)쪽.

“分設六房 曰吏戶禮兵刑工者 所以倣朝家之六曹也”

228)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正月 12日 癸亥.

229) 『世祖實錄』 卷13, 世祖 4年 8月 24日 己卯; 『世祖實錄』 卷39, 世祖 12年 9月 5日 癸酉; 『成宗實錄』 卷236, 成宗 21年 正月 5日 戊午.

230)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3月 17日 壬子; 『成宗實錄』 卷63, 成宗 7年 正月 22日 丁卯.

231)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4a(215)쪽.

“有萬曆間吏案 而書以戶正兵正倉正改正 爲房與色 似在壬辰亂後也”

232) 註 229, 230, 231 참고.

233) 권기중, 앞의 책, 1장 1절 참고.

234)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7月 13日 乙酉.

235) “今外邑 有鄉吏假吏之號 假吏不敢與鄉吏等 其要任者 皆鄉吏主之 尙閭陋風無處無之 甚可惡也(『星湖僊說』 卷10, 人事門, 胥徒褒貶)”

실록에서는 호장이 육방 記官에 차출된 개별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태종 18년(1418), 斗가 규정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刑을 받은 경기도 安城의 “戶房戶長記官”이 그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²³⁷⁾ 위의 사례보다 좀 더 분명한 사례로, 『慶州戶長先生案』에서는 안일호장으로서 慶州府 관아의 頭刑房으로 차출된 사례가 확인된다.²³⁸⁾ 여기서 두형방이란, 말 그대로 여러 형방 기관²³⁹⁾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자를 가리킨다.

최상층 향리로서 호장은 모든 記官의 수위자인 詔文記官이 되기도 했다. 본래 “詔書와 綸音 등의 글[文]을 쓰는 記官”²⁴⁰⁾이라는 뜻의 조문기관은, 고을 관아에서 근무하는 모든 記官의 수위자인 吏房 記官의 異稱이었다. 承政院 首席이자 吏房承旨인 都承旨가 국왕의 최측근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문기관 또한 수령의 최측근으로서 수령과 임기를 거의 같이 하였다.²⁴¹⁾

조선초기에 이르러 고을 관아에서 담당하는 행정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記官의 수가 늘어나면서 頭詔文記官과 副詔文記官의 위계까지 등장하였다. 『慶州戶長先生案』에서도 15세기 후반부터 府司의 수호장이 慶州府 관아의 두·부조문이 되거나, 두·부조문이 수호장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수호장이 두·부조문이 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除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두·부조문이 수호장이 되어 오는 경우에는 ‘陞差’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36) 『慶州戶長先生案』, 305쪽.

237)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正月 12日 癸亥.

238) “安逸戶長 李信 庚申八月初二月復行 爲頭詔文 以陞差 癸亥五月十二日 辭除爲 頭刑房差(『慶州戶長先生案』, 311쪽)” 해석본에는 李佺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李信을 잘못 본 것이다. 양자는 각기 다른 사람이다.

239) 육방 기관은 一道 觀察使의 監營과 一邑 수령의 관아에 모두 존재하였으며, 인원수는 관아별로 달랐다. 그러나 여섯 개의 방마다 각각 1명씩 여섯 명의 방 밖에 없었던 경우는 드물었던 듯하다. 함길도 감영에는 12명의 육방이, 咸興府에는 40명의 육방이 있었으며(『世祖實錄』 卷33, 世祖 10年 4月 28日 庚戌), 제주에서는 글자를 아는 양민 30여 명을 택하여 ‘典吏’라 명명하고 육방의 역을 대신하게 하였다(『世宗實錄』 卷36, 世宗 9年 6月 10日 丁卯).

이처럼 육방 기관이 여러 명일 경우, 방마다 그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우두머리를 ‘頭’ 자를 붙여서 ‘頭○房’이라 부른 듯하다.

240)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1b(210)쪽.

“詔文記官者 謂其書詔誥綸音等文也”

241) 李勛相, 앞의 논문, 327쪽 註25의 표 참고.

아래 <표 1>은 燕山君 6년(1500)~중종 5년(1510) 慶州府司 수호장이 된 자들의 명단 중 일부를 『慶州戶長先生案』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수호장에 처음 선임된 경우엔 ‘差’, 두 번 이상 선임된 경우엔 ‘復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수호장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開印行公’이라 했다.²⁴²⁾ 수호장의 임기는 수호장이 두조문 등 다른 직임으로 제수되거나 遞任되거나 스스로 辭任할 경우 종료되었으며, 며칠 내에 새로운 수호장이 선임되었다. 현임 수호장이 사임한 당일, 새로운 수호장이 선임되는 경우도 많았다.

<표 1> 연산군 6년(1500)~중종 5년(1510), 慶州司의 수호장 명단

안일호장 李 信	1500년 8월 2일 復行하였는데, 두조문에서 陞差하다 1503년 5월 12일 辭하고, 두형방에 差하다
정조호장 金 潤	1503년 5월 12일 開印行公하다
안일호장 李 信	1503년 9월 24일에 復行하다 1504년 11월 10일 외조부 정조호장 金緒의 長孫 漢順과 교대하여 두조문으로 제수되다
정조호장 崔永漣	1504년 11월 12일 差하고, 25일 開印行公하다 12월 17일 其人으로 제수되다
정조호장 金漢順	1504년 12월 19일에 差하고, 26일 開印行公하다 두조문에서 陞差하다
...	
안일호장 李 信	1507년 윤정월 10일 두조문에서 復行하다 동년 7월 14일 辭하다
호장 鄭 富	1507년 7월 14일 差하고, 26일 開印行公하다 1508년 7월 2일 바뀌다
안일호장 李 信	1508년 7월 2일 復行하다 1509년 6월 21일 辭하다
정조호장 李枝衍	1509년 6월 21일 부조문에서 陞差하고, 7월 11일 開印行公하다 1510년 7월 17일 辭하다

242) 세종 27년(1445) 정월부터 『慶州戶長先生案』에서 ‘掌印行公’ 대신 ‘開印行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윤경진은 같은 해 임내 공수전이 혁파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인신을 통한 수호장의 직능 수행에 대한 통제 강화”를 상정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001, 13쪽).

〈표 1〉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安逸戶長 李信의 직임 변화를 통해, 16세기 초 읍사 수호장과 고을 관아 두·부조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신은 연산군 6년(1500) 8월 2일 두조문에서 수호장으로 승차하였으며, 동왕 9년(1503) 5월 12일 수호장을 사임하고 두형방에 차임되었다. 그 후 같은 해 9월 24일 이제 두 번째로 수호장이 되어서 읍사에 복귀하였다가, 이듬해 11월 10일 現任 두조문 漢順과 交代해 두조문으로 제수되었다.²⁴³⁾ ‘교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부터, 두조문이 평생의 직임이라기보다는 향리가 일정 기간 입번하여 맡는 직임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 후, 이신은 2년이 조금 넘도록 고을 관아의 두조문으로 근무하다가, 중종 2년(1507) 수호장으로 복귀하였으며, 동년 7월 14일 사임하였다가 이듬해 7월 2일 다시 복귀하고, 그 이듬해 6월 21일에 다시 사임하였다. 요컨대, 연산군 6년(1500) 8월부터 중종 4년(1509) 6월까지 약 10년 간 안일호장 이신은, ‘두조문 → 수호장(1500.8.2.) → 두형방(1503.5.12.) → 수호장(1503.9.24.) → 두조문(1504.11.10.) → 수호장(1507.윤1.10.) → (사임, 1507.7.14.) → 수호장(1508.7.2.) → (사임, 1509.6.21.)’ 순서로 직임 변화를 겪어왔으며, 각각의 임기는 대개 1~3년 정도였다.²⁴⁴⁾

앞서 말했듯이 『慶州戶長先生案』에서 두·부조문이 수호장이 되는 것을 ‘陞差’, 곧 ‘陞進 差任’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일반 호장은 몰라도 수호장만큼은 이때까지 記官의 수위자인 두·부조문보다 상위로 취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수호장이 두·부조문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격에 맞지 않는 용어임에도 국왕이 직접 관직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제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一邑之主’인 수령의 최측근이자 記官의 수위자로서 조문기관의 특별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선생안에서 유일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같은 記官이라도 조문기관이 아닌 ‘두형방’은 ‘제수’ 대신 ‘差’를 사용하였다.

243) 경주시·경주문화원, 앞의 책, 311쪽에서는 漢順을 李漢順이라고 표기해 성씨를 李氏로 상정하였으나, 李信은 金緒의 外孫이고 한순은 김서의 長孫이므로 이신과 한순의 성씨가 같을 필요는 없다. 같은 책, 312쪽에 실린 김한순의 四祖 관계에서 외조부의 이름이 김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때 한순은 김한순이었음이 틀림없다.

244) 『慶州戶長先生案』, 311~313쪽.

경주의 호장들은 慶州府使가 주재하는 경주부 관아의 記官뿐만 아니라, 경상도 관찰사가 주재하는 監營의 營吏(혹은 營記官)로도 차출되었다.²⁴⁵⁾ 감영이 경주에 있던 麗末鮮初에는 경주의 호장이 영리를 주로 구성하다가, 尙州로 감영을 옮긴 후부터는 여러 고을 호장들이 영리로 차출되었다.²⁴⁶⁾ 『慶尙道先生案』의 영리 명단에서는 경주 수호장의 성명이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안일호장 이신은, 『慶州戶長先生案』에서 확인되지 않는 성종 원년(1470)부터 연산군 4년(1498)까지 30년 가까이 경상감영에서 영리로 있었고,²⁴⁷⁾ 이후 두조문을 거쳐 연산군 6년(1500) 수호장이 됐다.

〈표 2〉 중종 6년(1511)~중종 11년(1516), 慶州司의 수호장 명단

안일호장 金克精	[1495년~1511년 초까지 경상감영에서 영리로 근무] 1511년 2월에 差하였는데, 영리로 수일 내 당번으로 떠나다 1515년 9월 7일 復行하다
호장 崔 岱	1515년 ?월 8일에 差하고, 1516년 3월 23일에 바뀌다
안일호장 金克精	1516년 3월 23일에 復行하였는데, 동년 6월 영리로 떠나다 [1516년 초~1524년까지 영리로 근무]

또 다른 예로, 위의 〈표 2〉의 안일호장 金克精은 중종 6년(1511) 2월 수호장에 차임되었으나 영리로서 수일 내에 당번이 되어 감영으로 떠났고, 동왕 10년(1515) 9월에 수호장으로 복귀하였다.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6개월이 지난 동왕 11년(1516) 3월 김극정은 수호장으로 차임되었으나, 그 해 6월 다시 영리가 되어 감영으로 떠났다. 『慶尙道先生案』에도 김극정이 성종 26년(1495)부터 중종 6년(1511) 초까지, 중종 11년(1516) 초부터 중종 19년(1524)까지 영리로 근무한 사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²⁴⁸⁾ 읍사가 고을 관사의 지위를 잃고 향리 집단의 자치 조직에 가까워진 이상, 읍사의 首戶長職보다는 吏役인 營吏職이 우선시되었기에 김극정의 경우처럼 수호장으로 차임되더라도 영리 당번이 되면 감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245) ‘(監)營記官’은 『世宗實錄』 卷99, 世宗 25年 3月 25日 庚辰에서 확인된다.

246) 李樹健, 앞의 책, 365~366쪽.

247) 『慶尙道先生案』 (경주시·경주문화원, 앞의 책에 수록), 60~68쪽.

248) 『慶尙道先生案』, 68~72쪽 및 74~76쪽.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는 육방 기관은 俗稱 ‘衙前’이라 불리기도 했다.²⁴⁹⁾ 특히, 세종조 이후부터 육방 기관을 ‘아전’이라 칭하는 사례가 자주 보이며, 『經國大典』 兵典 土官職에서는 중앙 각사에서 근무하는 吏屬을 ‘京衙前’,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는 육방 기관을 ‘外衙前’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²⁵⁰⁾ 아전은 대개 衙舍(혹은 東軒) 앞에 위치한 ‘官廳’ 건물에서 근무했으며,²⁵¹⁾ 관아에서 근무하는 아전의 수가 많고 아전 업무가 세분화된 고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전의 근무처가 분리되어 별도로 성립하기도 했다.²⁵²⁾ 아전의 근무처는 ‘椽廳’²⁵³⁾ ‘作廳’²⁵⁴⁾ ‘人吏廳’²⁵⁵⁾ 등으로 불리었다.

호장 또한 記官으로 차출되어 고을 관아에서 근무하는 이상 아전이었다. 호장으로서의 본래 업무와 아전으로서의 업무는 일정 부분 중첩되었으며, 특히 호장과 이방은 ‘공형’으로서 함께 고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中寧山皇甫城記에서도 全羅道 長興府의 호장과 조문기관 [이방]이 築城 공사를 함께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며,²⁵⁶⁾ 『默齋日記』에서는 경상도 성주의 호장과 이방이 함께 官廳 雜物을 조사하였다고 언급된다.²⁵⁷⁾ 고을에 逆謀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개 호장과 이방이 문책을 받아, 兩界나 京畿·江原道 등에 위치한 殘驛의 吏로 보내지기도 했다.²⁵⁸⁾

249) 『木川縣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志-忠清道 ②』, 아세아문화사, 1984, 414쪽).

“衙前即官吏 本朝郡縣 倣高麗鄉職之制 置戶長及吏戶禮兵刑工 六房及各任 通稱衙前”
250) 『經國大典』 兵典, 京衙前條 및 外衙前條.

251) 읍지 기록상으로는, 선조 20년(1587) 편찬된 현존 最古의 읍지 『咸州誌』(경상도 咸安)에서 東軒 및 衙舍와 구분되는 ‘官廳’이 확인되며, 동왕 41년(1608)의 『永嘉誌』(경상도 安東)에서도 총 65칸으로 구성된 ‘관청’이 확인된다.

252) 인조 8년(1630) 편찬된 『商山誌』(경상도 상주)에서는 관청(4칸)과 별개로 ‘椽廳’(21칸)이 확인된다. 이곳은 아전 38인의 근무처였다.

253) 위와 같음.

254)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1a(209)쪽.

“稱諸吏所居之廳曰 作廳者 謂事務都作之廳也”

255) 『咸州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志-慶尙道 ①』, 아세아문화사, 1982, 702쪽), 『永嘉誌』(같은 책, 115쪽), 『普陽誌』(같은 책, 163쪽) 등.

256) 『東文選』 卷76, 記, 中寧山皇甫城記. “戶長吳因教 文記官曹修 摠其事功”

257) 『默齋日記』 明宗 8年 10月 2日.

“二道欲偕仁同來見 適牧伯令吏房戶長搜考官廳雜物 故未果來云云”

258) 세조 3년(1457) 錦城大君 李瑤가 順興府에서 역모를 꾸미자, “호장·기관·장교로서 우두머리 되는 자는 官에 참여하여 일을 맡아보면서도 이유가 雜人과 물

그러나 호장과 아전은 —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 각각 民을 대표하고 官을 代理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구분되는 존재였다. 호장의 아전 차출은 民이 잠시나마 官에 소속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호장과 아전의 업무 자체가 구분되는 모습도 보인다. 예컨대, 『湖南邑誌』(1895)에 실린 求禮 附事例에서는, 호장과 이방을 모두 ‘공형’이라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²⁵⁹⁾

戶長 以公兄 總察民戶 官奴婢出入臧否次知事

吏房 以公兄 總察邑事 人吏通引使令出入臧否次知事²⁶⁰⁾

즉, 호장은 민호를 總察하고, 이방은 邑事を 총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羅末 호장이 ‘고을 일을 처리하고 고을 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면,²⁶¹⁾ 조선후기 호장은 民戶의 장으로서 ‘민호를 살피는’ 위치로만 규정된 것이다. 이밖에 조선후기 호장의 업무로 읍지 및 읍사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관노비를 관리하고 땔나무·꿀·숯·얼음 등을 보관·상납하는 업무였다.²⁶²⁾ 『東江遺集』(1673)의 密陽志에서는 심지어 府司 자체를 “호장이 주관하면서 관노비를 관리하는 장소”, “땔나무와 꿀을 보관하는 장소”²⁶³⁾로 표현하였다. 위의 두 업무는 앞선 16세기에도 호장의 업무로 언급되고 있었다.²⁶⁴⁾

래 통하는 것을 살피지 않았다”고 하면서 강원도 殘驛吏로 보낸 것이 한 사례이다(『世祖實錄』 卷8, 世祖 3年 8月 2日 癸巳).

259) 求禮 附事例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리와 분석은, 金泰雄, 「朝鮮後期 邑事例의 系統과 活用」, 『古文書研究』 15, 1999, 38쪽 〈표 3〉 참고.

260) 『湖南邑誌』, 求禮 附事例(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全羅道 ②』, 아세아문화사, 1983, 142쪽). 동일한 읍지에 실린 高敞 附事例에도 마찬가지로 이방 업무가 “吏房一人 察邑事務 令三班舉行”이라 규정되어 있다(같은 책, 323쪽).

261)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3b(214)쪽.

“羅末諸邑土人 能號令治邑者 高麗統合後 仍賜職號 俾治其事治其民者 稱戶長”

262) 『湖南邑誌』, 高敞 附事例, “戶長一人 柴炬炭進排 領官奴婢等事”

관노비 또한 본래 읍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관아로 이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속된 후에도 관행에 따라 호장이 읍사에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3) 『東江遺集』 卷16, 別錄, 密陽志.

“府司在官廳之前 藏柴藟 戶長主之 戶長兼管官奴婢”

264) “戶長 送官婢 汲水以助之(『默齋日記』 明宗 卽位年 10月 3日)”, “上戶長朝來見 欲助薪東云 致遣四束(『默齋日記』 明宗 卽位年 10月 14日)”

조선후기 읍지·읍사례 내용을 모두 조선전기로 소급해 보기는 어려우나, 본래 호장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점차 고을 관아의 아전이 담당하게 되고, 그 업무가 육방 各所로 分掌되어간 사실만큼은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려초 이래 호장 고유의 권한이었던 민호 파악 및 부세 징수 업무 또한 고을 관아의 ‘戶房’이 분담하거나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세종 10년(1428) 戶口成給 規式이 완비됨에 따라²⁶⁵⁾ 호장이 전처럼 호구 정보를 독점하여 호구를 누락하거나 부세 징수 과정에서 권한을 발휘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호장의 도움이 없더라도 호구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²⁶⁶⁾

아전의 업무 수행은 앞서 언급했듯 吏職이 아닌 吏役으로 규정되었기에, 아전은 공식적으로 職田과 俸祿 등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향리는] 廩祿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입고 스스로 먹으며 官門에 立役하느라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기를 틈도 없이 장기간 분주하게 수고”²⁶⁷⁾ 한다거나, “중앙 관청의 吏는 常飭가 있으나 … 향리는 그렇지 않아 常飭가 없으니 … 향리직을 얻으면 굶주린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듯 奮起함이 지독하다”²⁶⁸⁾ 는 말은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영조 5년(1729), 비로소 향리에게 復戶를 내려 戶役을 면해줬으나²⁶⁹⁾ 생계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각 고을 아전은 부세 징수 과정에서 일종의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吏職 수행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였다. 16세기 교환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貢物 代納·防納과 放軍收布가 성행하는 등 부세 수납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아전이 부세 징수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성종 때 富平 記官은 貢物 代納價로 綿布 124필을 거두어들였고, 호장은 입번하는 군인을 놓아 보내는 대신 면포 174필을 거두어들였다.²⁷⁰⁾ 이밖에 별도의 부세 운영이나 抑賣 등을 통해 비공식적 재원을 마련하여, 관청 비용 및 아전의 廩料를 조달하는 관아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²⁷¹⁾

265)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5月 2日 癸丑.

266) 권기중, 앞의 책, 30~31쪽 참고.

267) 『順菴集』 卷16, 雜著, 木州政事, 諭作廳文.

268) 『與猶堂全書』 1集, 詩文集 論 鄉吏論.

269) 『掾曹龜鑑』 卷1, 吏職名目解, 7b(222)쪽.

270) 『成宗實錄』 卷274, 成宗 24年 2月 29日 甲子.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 아전의 謀利 행위는 부세 ‘橫斂’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모리 행위는 외형상 官의 권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앞서 언급된 호장 개인의 ‘횡령’ 행위보다는 공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 정도가 심하여 민폐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默過되었다. 아전으로 차출된 호장이 부세를 징수하고 때로 횡령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해 호장으로서 자격 덕분이라기보다 아전으로서 자격 덕분이었다. 읍사가 관사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호장의 업무를 아전이 대신하던 상황에서, 아전으로 차출되지 않으면 부세를 징수할 공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官의 위세를 배경으로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²⁷²⁾ 예컨대, 세종 때 黃海道 鳳山の 記官이었던 李峻은 官家의 田獵을 빙자하여 많은 軍民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면서 민간에 숙박과 대접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옷을 화려하게 입고는 高官인 척 가장하여 불법을 자행하였다.²⁷³⁾ 아전은 또한 관아에서 허드렛일 하는 使喚과 관노비를 자신의 휘하에 두어 사적으로 使役하였으며,²⁷⁴⁾ 官婢의 경우에는 첩으로 삼기도 하였다.²⁷⁵⁾ 위의 행위는 모두 『經國大典』에서 규정한 ‘원악항리’의 행위에 해당했지만, 아전이 고을 관아에서 一邑 庶務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일반 민이 아전의 권위에 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271) 세종 6년(1424) 申丁理의 上書에 따르면, 각관 아록전과 공수전의 전조가 관청의 1년 경비를 채우기에 부족하여, 고을 吏가 鹽貨를 민간에 抑賣함으로써 사객의 접대비용을 마련했다고 한다(『世宗實錄』 卷26, 世宗 6年 10月 丁未). 이로부터 각 고을 관아가 아록전과 공수전 등 공식적 재원 외에 비공식적 재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후기 경상도 豐基郡에서는 호장과 이방이 각자 契房을 운영하여 계방 가입민들에게 소정의 금품을 받고 대신 부역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조선후기 계방과 관련해서는, 金炯基, 「조선후기 契房의 운영과 부세수취」 『韓國史研究』 82, 1993 참고.

272) 『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 “假仗官威 侵虐民人者”

273) 『世宗實錄』 卷116, 世宗 29年 5月 19日 己酉.

274) 『世宗實錄』 卷73, 世宗 18年 閏6月 19日 癸未.

“各官奴婢 多小不同 多者 守令漫不知其數 皆爲鄉吏使喚”

275) 『端宗實錄』 卷9, 端宗 元年 12月 25日 丁未.

“今文義鄉吏李蕃李華等 當國喪之初 群聚宴飲 游歌肆淫 竝畜二妻 以官婢爲妾 隱占百姓及官奴婢 使喚者多 罪惡甚大 已定黃海道站吏”

이러한 점에서 호장의 아전 차출은, 기본적으로는 吏役의 의무였지만, 지배층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호장이 읍사를 고을 관사로 유지하면서 고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원, 곧 물적 자원인 공수전과 인적 자원인 正·史가 필요하였다. 그러한 읍사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모두 고을 관아로 넘어감에 따라 더 이상 독자적으로 고을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호장층으로서, 수령과 관아의 위세에 기대서라도 일단 당장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한 다음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호장의 衙前化는, 외관제와 군현제의 강화를 배경으로 그동안 호장과 읍사가 점유해왔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호장 자신의 지위와 권한 유지를 위한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호장이 수령 예하의 아전이 된 이상, 수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였고, 지배층으로서 호장층의 위상 또한 고려시기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초기 중앙 정부가 주력한 지방 통제 정책을 배경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土豪的 권력과 전통적 권위에 기초한 호장의 향촌 지배가, 제도화된 국가 권력에 기초한 수령의 통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변화의 속도나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5. 結語

고려시기 호장은 신라말 지방 호족의 후신이자 각 고을 ‘民戶의 長’으로, 본관에서 명실상부한 토착 지배층의 위상을 차지하였다. 호장은 ‘邑司’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읍사 印信을 가지고 각종 공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民戶를 파악하여 부세를 징수하는 일이었다. 고려 정부는 지배층으로서 호장의 위상을 인정하여 중앙 관원의 例와 같은 鄉職과 職田을 내려주는 한편, 그 자제를 중앙 관원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호장층 자체 가운데 일부가 과거 등을 거쳐 중앙 관원으로 진출함에 따라, 한때 같은 가문 출신이었던 이들이 在京 士族과 在鄉 吏族으로 분화하였다.

그러나 鄉이 外官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해야 하는 ‘外方’으로 여겨지고 京·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鄉’의 ‘吏’인 호장의 지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外方은 독립된 지배 영역이 아니라 京에 종속된 피지배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원 간섭기 정부와 중앙 권세가의 외방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지배층으로서 호장층의 존립 기초였던 토착 기반은 실질적으로 무너져갔다. 외방에 農莊을 이룬 중앙 권세가가 田民을 影占하고 납세를 거부함에 따라 호장의 핵심 권한이었던 부세 징수 업무마저 무거운 책임, 苦役이 되었다. 향리의 업무를 吏職이 아닌 吏役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호장층은 ‘鄉吏’에 머물지 않고 ‘官吏’ 곧 품계를 가진 品官이 되어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려말 호장층이 冒受한 관직은 주로 別將·散員과 같은 하급 무관직으로, 實職이 아닌 散職(虛職)이었다. 비록 산직이라도 관직을 얻으면 향촌에서 ‘留鄉 品官’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 累代에 걸쳐 관직을 얻으면 在鄉 吏族에서 在鄉 士族으로 분화·이행하였다. 고려말 개혁파 사대부는 향리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각종 경로를 차단하고 호적을 작성해 품관과 향리를 분리하려 했으나 그것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품관과 향리의 구분은 조선 태종초에 이르러서야 일단 마무리될 수 있었다. 조선초기 품관이 ‘왕실 藩屏’이자 지방 통치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데 반해 향리는 법제상 ‘吏役’ 부담자로 규정되었고 免役도 전에 비해 어려워졌다.

정부가 호장을 ‘향리’라는 범주 안에 고착시켜 위상을 축소하려 했음에도, 개별 향촌 사회에서는 전통에 따라 호장을 ‘吏職’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호장이 향리 집단 밖에서는 ‘吏役’으로, 향리 집단 안에서는 ‘吏職’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호장의 역을 면해주는 것은 그 직과 별개의 문제였다. 호장층은 양인으로서 자유롭게 문·무과에 응시하여 관리가 되기도 했지만, 본관에서 호장직을 세습함으로써 토착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호장은 고려초 이래 본관에 토착하면서 이어온 전통적 권위를 가졌으며, 그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매년 국왕에게 肅拜하고 고을 제사를 주관하였다.

호장은 자신의 토지에 양민을 불러들여 사적으로 지배하기도 하였지만, 읍사에서 ‘掌印行公’하거나 수령이 있는 관아에서 공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수령이 파견된 고을에서도 호장은 여전히 호구 파악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부세 징수에서 私的 권한을 발휘하였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임내에서는 부세 징수가 한두 호장에게 일임되었으므로 부세 ‘橫斂’의 가능성이 있었다. 호장은 부세 징수와 함께 요역과 군역 등 고을 민의 동원 또한 전담했는데, 이는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것이었기에 인신 지배의 가능성이 더욱 컸다. 이에 정부는 호장이 지배하는 임내를 혁파하여, 수령이 지배하는 主邑 直村으로 만들고 임내 호장을 주읍 관아로 편입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했다.

세종 27년(1445)의 田制 改編에서 정부는 그동안 향리에게 분급하였던 인리위전을 혁파함으로써 ‘吏役’ 부담자로서 향리의 위치를 공식화하였다. 임내 읍사의 공수전이 혁파됨에 따라 읍사를 운영할 물적 자원을 박탈당한 임내 호장의 경우, 주읍 관아로 편입되어 그곳에서 吏役을 수행하게 되었다. 옛 임내 호장 역시 주읍으로 들어간 이상 향리가 아닌 ‘假吏’가 되었으므로 주읍 관아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위 ‘公冗’과 같은 요직을 맡기는 어려웠다. 반면, 향리로서 일찍부터 관아에서 근무한 주읍 호장은 요직을 독점하였다. 호장은 관아에서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六房 記官으로 차출되었으며, 최상층 향리로서 모든 육방 記官의 수위자인 吏房〔詔文記官〕이 되기도 했다. 읍사가 고을 관사의 의미를 잃고 향리 집단의 자치 조직에 가까워진 이상, 호장이 수호장으로 차임되더라도 당번이 되면 관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는 육방 記官은 속칭 ‘衙前’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호장 또한 記官으로 차출되어 고을 관아에서 근무하는 이상, 아전이었다. 호장으로서의 본래 업무와 아전으로서의 업무는 일정 부분 중첩되었지만, 점차 호장의 업무가 아전에게로 넘어가 六房 各所로 分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려초 이래 호장의 권한이었던 민호 파악 및 부세 징수 업무 또한 육방 중 하나인 ‘戶房’이 담당하게 되었다. 비록 아전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식적 대가는 없었지만, 아전들은 비공식적 재원을 통해 廩料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외에도 官의 위세를 배경으로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호장의 아전 차출은, 기본적으로는 吏役의 의무였지만, 지배층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읍사의 물적 자원인 공수전과 인적 자원인 正·史가 관아로 이속됨에 따라 더 이상 독자적으로 고을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호장층으로서, 수령과 관아의 위세에 기대서라도 일단 당장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한 다음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방식 자체로만 보면 고려시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을 자체가 혁파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고을에서 호장과 읍사는 존속하였고 읍사 印信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만, 鄉이 鄉吏인 호장의 독자적인 지배 영역으로 승인 내지 묵인되었던 고려초와 달리 鄉이 外官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할 ‘外方’으로 정착되면서,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수령의 통치 권력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기반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제 호장은 아전이 되어야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호장의 향촌 지배가 수령의 통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지배 양상의 변화로부터 中世國家 朝鮮의 集權化 방향을 읽을 수 있으며, 이후 향촌 지배는 수령과 호장(향리)·품관의 삼각 구도 속에 이루어졌다. 조선초기 유향 품관의 존재 형태와 향촌 지배 방식 또한 호장과의 관계 속에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나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다.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 考 文 獻

1. 자료

1) 연대기류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國朝寶鑑』, 『東史綱目』

2) 법전류

『經國大典』

3) 일기류·문집류

『孤山遺稿』, 『記言』, 『東江遺集』, 『東文選』, 『默齋日記』, 『星湖僊說』, 『順菴集』, 『與猶堂全書』, 『林下筆記』, 『佔畢齋集』

4) 읍지와 지리지

『邑志』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志』, 아세아문화사)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e-kyujanggak.snu.ac.kr)

5) 선생안

『慶州戶長先生案』, 『慶尙道先生案』

(경주시·경주문화원, 조철제 譯, 『(國譯) 慶州先生案』, 세종인쇄사, 2002)

5) 기타

『掾曹龜鑑』, 漢典(www.zdic.net)

2. 연구 논저

1) 연구서

- 姜恩景,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혜안, 2002.
-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 金泰雄,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 朴敬子,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2001.
- 朴龍雲, 『高麗時代 官階·官職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李景植, 『韓國中世土地制度史 - 高麗』,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_____, 『(증보판) 韓國中世土地制度史 - 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한국학술정보, 2001.
- _____, 『(개정 증보판) 朝鮮의 社會와 思想』, 일조각, 2004.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 _____, 『朝鮮時代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 이태진, 『(증보판)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 李勛相, 『朝鮮後期の 鄉吏』, 일조각, 1990.
-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1999.
-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韓永愚,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집문당, 1997.
- _____, 『과거, 출세의 사다리 1 (태조-선조 대)』, 지식산업사, 2013.
- 허홍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
- 존 B. 던킨, 김범 역, 『조선왕조의 기원』, 너머북스, 201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혜안, 2005.
-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2) 연구논문

- 姜恩景, 「高麗時期 鄉吏 公服制」 『韓國思想과 文化』 4, 1999.
-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韓國史學報』 5, 1998.
- 金光洙, 「高麗時代의 胥吏職」 『韓國史研究』 4, 1969.
- _____, 「高麗時代의 同正職」 『歷史教育』 11·12, 1969.
- _____,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 『韓國史研究』 7, 1972.
- _____,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1979.
- _____, 「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兩班戶籍整理」 『歷史教育』 35, 1984.
- 金光哲, 「麗蒙戰爭과 在地吏族」 『釜山史學』 12, 1987.
- 金東洙, 「茶山の 鄉吏論」 『龍鳳論叢』 13,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 _____, 「고려 중·후기의 監務 파견」 『全南史學』 3, 1989.
- 金俊亨, 「朝鮮後期 蔚山地域의 鄉吏層 變動」 『韓國史研究』 56, 1987.
- _____, 「조선시대 향리층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사회와 역사』 27, 1991.
- 金泰雄, 「朝鮮後期 邑事例의 系統과 活用」 『古文書研究』 15, 1999.
- 김필동,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 上·下」 『韓國學報』 8-3·4, 1982.
- 金炯基, 「조선후기 稷房의 운영과 부세수취」 『韓國史研究』 82, 1993.
- 羅恪淳, 「高麗 鄉吏의 身分變化」 『國史館論叢』 13, 1990.
- 朴敬子, 「高麗 鄉吏制度의 成立」 『歷史學報』 63, 1974.
- _____, 「高麗時代의 鄉吏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朴恩卿, 「高麗後期 地方品官勢力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4, 1984.
- _____, 「고려후기 향리층의 변동 -世宗實錄地理志 續姓 분석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64, 1987.
- 朴鎮愚,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韓國史論』 20, 1988.
- 裴基憲, 「朝鮮後期 作廳의 運營과 그 性格」 『啓明史學』 6, 1995.
- 오중록·박진우, 「고려말 조선초 향촌사회질서의 재편」 『역사와 현실』 3, 1990.
- 禹熙女, 「朝鮮前期의 伴尙制와 假伴尙問題」,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尹京鎮, 「朝鮮初期 郡縣體制의 改編과 運營體系의 變化」 『韓國史論』 25, 1991.

- _____, 「高麗前期 鄉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 『韓國文化』 20, 1997.
- _____, 「고려전기 戶長의 기능과 外官의 성격: 지방행정체계상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7, 1999.
- _____, 「慶州戶長先生案 舊案(慶州司首戶長行案)의 분석: 1281~1445 부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9, 2001.
-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 _____,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동아문화』 13,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6.
- _____, 「朝鮮前期 中人層의 成立問題」 『동양학』 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8.
- _____, 「朝鮮初期 身分史 研究의 再檢討」 『歷史學報』 102, 1984.
-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 - 戶長에 대하여」 『文理大學報』 3, 영남대, 1974.
- _____, 「高麗時代 ‘邑司’ 研究」 『國史館論叢』 3, 1989.
- _____, 「麗末鮮初 土姓吏族의 성장과 분화 - 安東權氏를 중심으로」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일조각, 1994.
- 李純根, 「高麗初 鄉吏制의 成立과 實施」 『金哲俊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 李佑成, 「麗代 百姓考」 『歷史學報』 14, 1961.
- _____,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 『歷史學報』 23, 1964.
- 李章雨, 「朝鮮初期의 衙祿田과 公須田」 『李基白先生 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下)』, 일조각, 1994.
- 李惠玉, 「高麗時代의 鄉役」 『梨花史學研究』 17·18, 1988.
- 李勛相, 「掾曹龜鑑의 編纂과 刊行」 『震檀學報』 53·54, 1982.
- _____, 「高麗中期 鄉吏制度의 變化에 對한 一考察」 『東亞研究』 6, 1985.
- _____, 「朝鮮時代의 邑司와 作廳」 『아시아문화』 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 全宇哲, 「朝鮮後期 鄉村社會에 있어서의 吏胥階層研究」 『震檀學報』 60, 1985.
- 鄭杜熙, 「高麗末期의 添設職」 『震檀學報』 44, 1977.
- 鄭震英, 「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土族의 鄉村支配」 『대구사학』 27, 1985.
- 趙 珖, 「資料解題: 朝鮮時代 鄉村支配構造의 理解 - 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震檀學報』 50, 1980.

- 趙榮濟, 「高麗前期 鄉吏制度에 대한 一考察 - 制度上的 變化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6, 1982.
- 최승희, 「조선후기 향리신분이동여부고 (1)」 『金哲垞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 _____, 「조선후기 향리신분이동여부고 (2)」 『韓國文化』 4, 1983.
- 崔異敦, 「조선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震檀學報』 110, 2010.
- 崔鍾鐸, 「麗末鮮初 地方品官의 成長過程」 『學林』 15, 1993.
- _____, 「朝鮮初 鄉村支配勢力의 力學構圖」 『國史館論叢』 92, 2000.
- 韓永愚, 「麗末 鮮初 閑良과 그 地位」 『韓國史研究』 4, 1969.
- _____, 「조선초기 사회계층 연구에 대한 재론」 『韓國史論』 12, 1985.
- _____, 「조선시대 중인의 신분·계급적 성격」 『韓國文化』 9, 1988.
- 한우근, 「勳官 檢校考」 『震檀學報』 29·30, 1966.
- 武田幸男, 「高麗·李朝時代の邑吏田」 『朝鮮學報』 39·40, 1966.
- 北村秀人, 「高麗末·李朝初期の郷吏」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Abstract

Local Headmen's Control over Rural Communities and Its Chang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ee, Tae-Kyoung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fundamental change in the local headmen's (*hojang*, 戶長) control over rural villag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the movements of the local headman class in late Koryo and the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headmen. The headmen, who had ruled over rural villages as the leaders of the households in each district as well as the heads of local functionaries (鄉吏) since the early Koryo dynasty, strived to maintain and restore their positions as the ruling class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which aimed to exclude the local functionaries from the ruling class in the late Koryo and early Joseon dynasty, largely in two ways. First, the local headmen would bribe for public posts and remain in the local villages with the status of *yuhyang pumgwan* (留鄉品官). Second, the headmen would retain their position as the leaders of the households but also became *ajeon* (衙前), that is, the local civil functionaries who work in government offices of each district, so that they could wield influence over the rural communitie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local headmen's rule of the rural communiti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ith that in the Koryo dynasty, in that the headmen handled official business by using official seals at each local office ('邑司'). However, unlike in the early Koryo dynasty when the local (鄉) communities had been accepted or overlooked as being independently ruled by the local headmen who served as local functionaries,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declared to be outer provinces under direct rule of the regional district offices. As a result, the headmen's rule over the local communities in early Joseon went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as the headmen had to rely on the authority of the local district magistrates in a large part. This became especially the case in 1445, the 27th year of King Sejong, when the assigned land to the local functionaries and the land for official expenses in each district went through reform; the functionary duty was placed on the local headmen and their material resource for running the local offices were also taken away.

The local headmen, who were unable to take independent control over local districts as the land, their material resources, and *jeong* (正) and *sa* (史), their human resources, were subjected under the control of the regional district offices and became civil functionaries so as to maintain their status, authority and influence. This was a gradual change, as the local headmen's control over the local communities, which was based on the noninstitutionalized local power and traditional authority, was gradually replaced with the rule of the local district magistrates who represented the institutionalized state authority. This proces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ntrol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signifie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medieval state of Joseon.

**keywords : Local Headmen (*Hojang*), *Yuhyang Pungwan*, Local Control,
Control over Rural Communities, Land Reform in 1445, Local Civil
Functionaries (*Ajeon*)**